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

이용교

복지공동체

머리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450가지 이상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복지급여를 잘 모르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필자는 시민들에게 복지급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드림에 매주 한 편씩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집필하였다. 2024년에 쓴 52편을 모아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을 발간한다. 이 책은 모든 국민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알고 누리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국민은 누구든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주요 복지급여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살도록 2024년에 부모급여를 인상하였다.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고,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보육료 등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하며,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과거에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것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것도 늘었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방학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렸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에 정확히 알아야 복지급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복지상식을 늘려야 한다. 우선 2024년부터 달라진 제도와 법규 등을 확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보자.

첫째, 결혼과 출산 시에 증여세가 확 낮아졌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초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이었고,

2023년엔 0.72명이다. 정부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 시에 (조)부모의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를 확 낮추었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다.

둘째, 교육·보육·가족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 3월에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셋째, 보건·복지·고용 관련 급여가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넷째, 문화·관광·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된다.

다섯째, 교통·주택 관련 서비스가 삶의 질을 바꾼다.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었고,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된다. 2월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되었다.

여섯째, 국방·행정·안전 관련 제도도 바뀐다. 1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작년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은 독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용교

차례

머리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6월에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

최대 50% 할인 받아 가을 여행을 떠난다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이 바뀐다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아동>

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사전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받는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학생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방학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세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은 문화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한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노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집과 같은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치매, 이렇게 대처합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발표되었다
외국인 1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폐지수집 노인의 지원대책은?
중장년층은 50플러스센터를 활용하세요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인상되었다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시민>
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위기가구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다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백신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잠복 결핵감염을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꾼다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6월에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
최대 50% 할인 받아 가을 여행을 떠난다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이 바뀐다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아동>

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사전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받는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학생 안전지원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방학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세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은 문화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한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노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집과 같은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치매, 이렇게 대처합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발표되었다
외국인 1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폐지수집 노인의 지원대책은?
중장년층은 50플러스센터를 활용하세요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인상되었다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시민>
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위기가구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다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백신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잠복 결핵감염을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꾼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이 안내 책자에는 450여 개 복지서비스가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나타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와 대상을 고려하여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누구든지 파일로 내려받아서 읽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한 이웃이 복지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

<나와 가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450여 종이 넘는다. 복지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여성 등이 이용할 수 있기에 한 사람이 450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정부가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복지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 육아와 내 집 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등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들었다.

복지서비스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은 복지서비스를 활

용할 수 있다. 과거에 복지서비스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자산 수준, 부양의 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기 바란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책자 파일을 열면 ‘차례’(4쪽)에서 복지서비스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별 복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생계지원, 취업지원, 임신·보육지원, 청소년·청년지원, 보건의료 지원, 노령층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혹 관심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418쪽)을 활용하기 바란다.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특정 사업은 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에 따라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도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있는데,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주요 기관 연락처는 책 430쪽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국민이 상황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상황별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계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6쪽), 긴급복지 지원제도(19쪽), 주택임대 사업(25쪽), 통합문화이용권(58쪽) 등이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다. 실업급여(66쪽), 국민취업지원제도(68쪽), 국민내일배움카드제(69쪽), 근로장려금(75쪽) 등이 있다. 임신·보육 지원 서비스는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7쪽), 보육 지원(119~130쪽), 방과후 돌봄(139~142쪽) 등이 있다. 청소년·청년 지원 서비스는 교육, 자립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147쪽),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65쪽), 장학금 지원(173~184쪽) 등이 있다.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건강보험제도(194쪽), 건강보험 차상위(19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16쪽) 등이 있다. 노령층 지원 서비스는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기초연금제도(220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4쪽), 치아관리비용 지원(231~232쪽) 등이 있다. 장애

인 지원 서비스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준다. 장애인연금(244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64쪽), 장애인 활동지원(287쪽) 등이 있다.

이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자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한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복지로 누리집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나를 위한 복지급여를 복지로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소득과 자산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찾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도 있다.

많은 복지급여를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이다. 영유아 관련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등이다. 아동·청소년 관련으로 교육비지원, 아동급식,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장애인 관련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이다. 저소득 관련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 등이다. 노년·한부모 관련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같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에 최신 정보를 알면 좋다.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읽고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28종의 복지급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복지급여를 안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그동안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다. 여기에 39종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는 450가지가 넘고,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를 합치면 약 1만 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은 해마다 새롭게 생기고 또 바뀌는 정부 지원정책을 알아야 한다.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급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민이 한 번의 등록으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안내이다. 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인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기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가입신청 후에는 7일 이

내에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1차 안내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기반으로 2차 안내가 진행된다. 이외에 나이, 출산 등으로 수급 가능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안내해준다.

<맞춤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이다.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위기 알림, 복지지도, 복지 신고, 맞춤형 급여안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알고 싶다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다. 생애주기와 가구상황, 관심주제를 선정한 뒤 나이와 거주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복지멤버십이 제시된다.

청년이라면 생애주기를 ‘청년’에 두고 관심주제로 정신건강,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을 선택하고 난 뒤 지역을 입력한다. 그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제시하는 총 128종 5194건의 서비스 중에서 나의 복지멤버십으로 20건이 제시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음에 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검색된 복지급여 중에서 관심이 가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준 소득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무상이고 중위소득 70% 초과인 사람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

다. 복지지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이력,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된 복지급여 서비스 내역과 신청한 복지·민원서비스의 진행현황을 살필 수도 있다. 또한 증명서 발급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멤버십 관련 민원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복지멤버십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서식 파일도 제공하니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도 살필 수 있다. 지도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면 요양원과 사회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등 내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을 상세하게 소개해준다. 복지위기 알림도 있다. 본인이나 이웃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해준다. 노인 단독가구나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포함해 총 8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생애주기별 안내사업 10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 32종;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자격확인 안내사업 41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등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 6종 등이었다.

새로 추가된 39종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됐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 지원금(부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 등 임신·출산 관련 지원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전남), 충청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충남)과 같은 청·장년층 혜택도 추가됐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을 내려받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bokjiro.go.kr>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구인·구직과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100여 종의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고용24'가 시범 운영 중이다.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3월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취업이룸 등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고용 플랫폼인 '고용2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나 구인기업은 고용24에서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 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이 고용24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기업회원은 채용지원, 직업능력개발, 기업지원, 확인및신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은 개인회원이 이용할 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채용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일자리 찾기는 직종, 지역, 재택근무여부, 경력, 학력, 고용형태, 희망임금별로 검색할 수 있다. 직종은 1차 분류를 한 후에 2차 분류를 검색하고 3차 분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차 분류에서 건설·채굴을 선택하면, 2차 분류에서 건설·채굴 기계운전을 검색하여, 3차 분류에서 굴착기(굴삭기, 포클레인) 운전원을 찾는 방식이다. 같은 직종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세분되어 있기에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지역은 시·도별과 역세권별로 구분되어 있다. 본인이 구직을 희망하는 시·도를 클릭하면 전체와 시·군·구별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역세권별로 검색할 수도 있다. 구직자는 직종, 지역을 정한 후에 재택근무여부, 경력(전체, 신입, 경력, 관계없음), 학력(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졸(2~3년), 대졸(4년), 석사, 박사, 학력무관), 고용형태, 희망임금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선택]제), 파견근로,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곳에 채용정보 상세검색 기능도 있고, 채용행사,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자

주 검색하여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역량강화, 취업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취업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취업역량강화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리학교 취업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가이드는 자기소개서(자소서) 작성가이드, 직무별 자소서 작성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취업동향 모아보기, 취업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는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I 유형 구직수당신청,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유예·재참여 신청, (조기)취업성공 수당 신청, 운영기관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경험은 미래내일 일경험(기업탐방형), 미래내일 일경험(프로젝트형),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국민취업)일경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청년 구직자의 경우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고용24의 AI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탐색·설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자는 수급자격을 확인받고,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조건이 되는 사람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코너는 본인인증이 꼭 필요하기에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회원만이 활용할 수 있다.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구직신고를 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구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하면 남은 기간 구직급여일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하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찾기·신청, 훈련 기관·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현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일부 제외)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이다. 급격한 기술발전이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

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훈련 찾기·신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K-디지털 아카데미, 기업훈련과정, 일학습병행과정, 유관기관 훈련과정, 정부부처별 훈련과정, STEP 이러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 기관·강사는 훈련교사관리, NCS확인강사 신청, K-DT 교강사 신청, 인재뱅크신청, 훈련기관평가정보, 훈련교강사조회, 스타훈련강사조회, 지정직업훈련시설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을 갖춘 사람은 출산 휴가·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는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자는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정식 개통된다>

고용24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정식 개통된다. 워크넷, HRD-Net 등 기존 사이트도 당분간 함께 운영되다 고용24로 통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찾아 고용24 시연회와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고용24 모바일용 웹서비스는 m.work24.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향후 공식앱을 출시할 예정인데, 아직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에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앱을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구인·구직과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고용24’를 검색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

정부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생체정보를 감지하는 조끼·배뇨량을 측정하는 기저귀 등 선정기업엔 과제당 1~2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추진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활용할 6가지 복지기술과 시행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돌봄드림, 누비랩, 실비아헬스, 메디로지스, 맨엔텔, 마크노바다. 이들 기업은 돌봄조끼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 활용, 어린이집 푸드 스캐너 활용 등의 사회서비스 기술을 제출했다. 생활용품을 통해 노인이나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돌봄조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돌봄조끼’는 착용자의 심박수와 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조끼로, 생체 정보에 기반해 착용자가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관련기관에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된다.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상태로 지내면 호흡, 심장박동 등 생체 데이터가 축적된다. 혼자 사는 노인은 비상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평소에 ‘돌봄조끼’를 착용하면 비상상황을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과학자들은 생체 데이터와 스트레스 수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팀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잠을 자는 동안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도록 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스트레스 자가진단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점수와 총 수면 시간, 휴식 중 심박수, 심박수 변동성, 호흡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수면 시간이 부족했는데, 수면 시간이 한 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할 확률은 38% 줄었다.

연구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생체 데이터는 물론 자연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 정보도 수집했다. 자연에서 머무는 시간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치정보 데이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개입 방법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도 채취하여 혈액 검사 결과,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하면 스트레스와 연관된 더 많은 바이오마커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기저귀’로 배설물을 측정할 수 있다>

‘스마트 기저귀’는 실시간으로 용변과 배뇨량 등을 측정하고 욕창·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기저귀다.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에 요실금을 경험하기 쉽고, 요실금이 잦으면 기저귀를 상시 착용할 수밖에 없다. 요실금은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갑작스럽게 배의 압력이 높아질 때(재채기하거나 크게 웃을 때 등),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바로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다. 요실금 증상이 심하면 소변이 반복적으로 누출되어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서 운동, 외출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개인위생,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용변을 본 기저귀를 오래 채워 두면 피부가 짓무르고 발진이 생겨 건강에 좋지 않기에 힘들더라도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해야 한다. 번거로운 기저귀 교체를 정보기술(IT)로 해결한 ‘스마트 기저귀’는 AI가 기저귀 오염도를 확인해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로 교체시기를 알려준다. 스타트업 ‘모닛’도 스마트 기저귀를 개발했다. 기저귀에 전용 센서를 부착해 앱을 통해 기저귀 내부의 온도와 습도, 착용자의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들은 스마트 기저귀 알림으로 착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확한 기저귀 교체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 기저귀는 노인이 늘며 기저귀 차는 노인이 아기보다 더 많은 세상이 되면서 어른들에게로 퍼지고 있다. 스마트 센서가 달린 스트랩을 기저귀 바깥쪽에 부착하면 오염 정도를 알 수 있어 적절할 때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다. 편의성과 더불어 기저귀 교체를 말하기 꺼렸던 고령 환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다.

<‘푸드 스캐너’로 섭취량을 분석할 수 있다>

‘푸드 스캐너’는 식당 이용자의 식판을 스캔해 섭취량 등 영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푸드 스캐너란 이용자가 식사 후 식판을 스캔하면 특수 카메라가 잔반의 양과 부피를 측정하는 푸드테크 기술이 활용된 장치다. 개인별 잔반 데이터는 급식소의 식단 구성·보완에 활용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지구의날을 맞아 유통센터 구내식당에 푸드 스캐너를 도입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였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 10%에서 크게 30%까지 절감되었다”고 한다. 이 식당에서는 ‘푸드 스캐너 잔반 제로 캠페인’도 구상했다. 매달 잔반집계량이 가장 적은 이용자 1~3등을 뽑아 구내식당·공유카페 이용권을 시상한다. 최다 참여자 15명에게는 푸드테크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품도 준다. 음식물 쓰레기 폐기·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에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관리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푸드 스캐너를 활용해보자.

<‘꿈의자전거’로 디지털 여행을 할 수 있다>

‘꿈의자전거’는 실제와 동일한 가상 도로에서 디지털 여행을 할 수 있는 하지운동기구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잘 먹고 잘 자며 적절히 운동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저항성 운동,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유연성 운동, 몸의 중심을 잡는 균형 운동을 모두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에는 자전거 타기와 수영, 걷기 등이 있고 근력 운동으로는 아령 운동 등이 있다. 또 몸에 저항이 느껴지거나 약간 불편한 정도까지 신체를 이완시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는 유연성 운동은 물론 일자로 걷기, 의자 잡고 한 발로 서기 등 균형 운동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의료계에선 노쇠 역시 건강한 노화와는 구분되는 신체 기능 저하 현상으로 노쇠를 예방하고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근력운동 등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근육의 질을 개선하면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시범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로는 강원 홍천군,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시, 충남 금산군, 경기 동두천시가 선정됐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과제당 1~2억 원을 지원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실증결과 확인서를 수여한다.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네이버 지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가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발급받은 산모의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산모·신생아바우처'라고 검색하면 주변의 기관(기관 이름, 주소,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기관을 클릭하면 연락처와 함께 블로그, 이용자의 리뷰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등),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 및 신청 사이트이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이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전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사업별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용안내, 공지사항과 이벤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등이다. 예컨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단,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게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5일~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지원시스템 이용가이드는 시·군·구 담당자, 교육기관,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회원가입자만 이용가능하다. 이 포털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의 명칭으로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한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뒤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바우처의 명칭으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사는 곳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에서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신설해 이용

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 명은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선택·예약할 때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6월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뽑았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참여자들이 협력해야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대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하는 설계자이다. 시·군·구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는 일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도 선정하고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서비스 결제 승인, 자금 관리, 카드 및 단말기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활동하며,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바우처는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특별하다. 전자바우처 카드 안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바우처는 단순한 카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요 구성 요소들을 보면, 바우처 카드(서비스 이용의 열쇠 역할), 결제 단말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 전산 시스템(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 정책 지침(바우처 사용의 가이드라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어떤 사람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회원가입부터 해야 한다. 아동의 이름으로 부모(보호자) 중 한 사람이 가입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가입하면 된다.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6월에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

6월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6월에 65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6월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은 글씨 설명문만으로 충분한 의료기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정보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수어영상 등을 서비스하도록 법률을 시행한다.

6월 14일부터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의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한다>

6월 27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른 나이에 입학한 고등학교 3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연령이 1세 상향되자 이른 나이에 입학한 대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자가 처벌받게 되어 영업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첨가되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다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을 따랐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뀐다. 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미성년자”로, “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개정한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검색하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나온다. 해당 법률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둘러 수정해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개월이다>

6월 1일부터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은 납입한도(지원한도) 40만 원인데, 2025년부터 55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매칭비율 100%로 전역 때 1469만 원까지 수령해 가는데,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55만 원으로 확대되면 전역 때 2019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장병은 나라사랑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병은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받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각종 급여·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으로, 병역증·전역증으로도 활용되는 카드다. 예컨대, KB국민카드의 나라사랑카드는 군 마트, 교통, 커피, 영화 등 주요 수요처에서 최대 20~35%의 청구·환급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이 넓어야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 체크카드 상품과 비교되는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연 최고 4.50%의 금리를 주는 'KB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판매 중이다. 현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과 IBK기업은행(BC카드)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나 여러 부가서비스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은행권으로선 사회공헌과 신규고객을 묶어두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의 자세한 사항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대 50% 할인 받아 가을 여행을 떠난다

정부는 신청한 국민이 '최대 50% 할인' 받고 11개 주제·70개 지역 가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지원한다.

<정부는 가을철 여행캠페인을 벌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가을에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과 기차여행 행사, '여행친구 여진구'와 함께하는 지역여행, 대국민 여행 시기 공모 등 풍성한 가을철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서 문화체육부와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국내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대국민 여행캠페인의 일환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객으로 북적이게 해 지역경제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여행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 여행을 준비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 '로컬페스타',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로컬 스토리',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가을 '디톡스 여행', 가을 속 풍경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미식의 계절, 제철 음식이 반기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된 70여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가을 축제를 방문하는 여행을 시도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을 여행'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관광 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 교통 할인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50만 장을 배포하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내 2개 이상 축제를 방문하고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가하기 바란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 '페스티벌 시월' 등 개최를 통해 지역 관광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행은 혼자 혹은 함께 가서 보고 듣고 먹고 사진찍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다.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연다. 문화, 가을, 미식 등 11개 주제의 70여 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30% 할인하고 최대 50% 할인한 ‘웰촌 농촌여행상품’도 선보인다. 할인혜택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웰촌 농촌여행상품은 전통음식 만들기, 농작물 수확 체험 등 계절별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 가능한 활동은 농장에서 직접 장을 담그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효과정을 체험하는 전통 장 만들기 체험, 감 따기, 밤 줍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계절별 수확 체험, 목장에서 소, 염소, 양 등과 교감하는 동물 교감 체험 등이 있다.

<당일 기차여행을 1인당 4만9천 원으로 해결한다>

또한 2000여 명이 전국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여행가는 가을,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2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가을엔 여기로’를 8차례 운영해 1인당 4만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 회차당 3개 지역씩 모두 24개 지역을 찾아간다. 11월 1일, 8일, 12일, 13일 등 8회에 걸쳐 운영하고 1인당 4만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주요 방문지는 아름다운 섬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연 명소인 자라섬,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고,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전통시장 투어, 지역별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 등이다.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일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의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쓰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 한국관광공사의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에 동의하면 된다. 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다자녀 가정이 참여하는 행사는 6명까지), 신청자나 동반자로 등록된 사람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중복하여 신청하면 ‘부정 신청자’로 탈락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 철도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여행가는 가을 철도 할인 프로모션’으로 관광열차 할인, 내일로 패스, 자유여행 상품 구매시 할인을 제공한다. 그중 관광열차 할인은 관광열차 5개 노선 대상 승차권 할인(주중 및 주말 최대 50%)이다.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등이다.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은 구매 시 1만원 정액을 할인해준다.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를 이용할 때 할인이 적용된다. ‘자유여행상품 구매시 할인 지원’은 상품 이용자 대상 KTX 1만 원 할인권 제공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판매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내일로패스는 10월 25일부터 판매한다. 탑승기간은 11월 1일~11월 30일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철도공사 고객센터(1544-7788) 및 부산·광주 KTX역 여행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도 있다>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 친구 여진구’, ‘여행 수기 공모전’ 등 참여 행사도 확대한다. 11월에는 배우 여진구 씨가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참가자들과 함께 자라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친구 여진구’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을 선발한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어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하고 최우수 수기는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기간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여행수기와 여행사진을 이메일(kto.autu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알뜰하고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국내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http://korean.visitkorea.or.kr>

웰촌 <https://www.welchon.com>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의회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상이고, 13세~18세 청소년은 반값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를 탈 수 있다.

<‘광주 G-패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키로 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시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6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이 중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박미정 시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으로 고물가 시대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즉시 할인된다>

‘광주 G-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생년월일을 등록한 뒤 사용하면 2025년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한 뒤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부모 등 타인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구입해 승차해야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 매일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하면 다음달 환급된다. K-패스를 발급하여 등록한 시민은 2025년부터 광주G-패스가 시행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광주광역시가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성인은 연령대에 따라 지원비율과 지원금액(월 40회 이용시 기준)이 다르다.

청년(19세~39세)은 이용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고(월 한도 15,000원), 중년(40세~64세)은 20%(10,000원), 노인(65세 이상)은 50%(25,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64%(3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지원한도를 모두 쓰면, 성인 부모 2명+대학생 1명+중고생 1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월 51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어린이의 경우 버스 400원, 지하철 500원이고, 청소년은 버스 800원, 지하철 900원이다. 연간 1450억 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지원액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은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상이다>

2024년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 김해시에서 어린이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상이다. 어린이는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이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탑승할 때 무료 요금이 찍히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제도 시행과정에 불가피할 것이다.

어린이는 6세~12세이기에 만 6세 미만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만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승차하고 단독으로 승차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6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무상으로 탑승하고, 6세 이상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해야 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나?>

K-패스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광주광역시의 G-패스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런데, 부산, 울산, 김해에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23년 10월에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카드 무상화를 도입했다. 일반버스, 급행버스 상관없이 무상이고, 부산 도시철도 1~4호선까지 무상이기에 2호선의 호포역~양산역 구간 이용자도 혜택을 받았다. 다만 현금 승차의 경우 일반 400원, 좌석 1300원을 내야 한다. 부산에서 대중교통 무상을 시작하면서 인접한 김해시는 무상 정책을 도입했지만, 양산시는 아직 무상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한정으로 무료화되었다. 시내버스나 군내버스를 교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본 사례이다. 화성시의 경우 횡수 제한이 있고 시외 구간은 불가능하다. 어린이 대중교통의 무상화 정책은 도입 초기에는 무상 혹은 100원 요금제이었는데, 전

국 무상화로 확대가 바람직하다.

<무상화 정책은 이용 승객을 늘린다>

대중교통 무상은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승객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어린이 무상화 전후로 한 달간 이용 승객을 비교했는데 승객이 늘었다고 했다. 평일에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주말의 어린이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는 어린이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상화 이후 보호자와 함께 탄 어린이의 교통 요금으로 논란이 생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찍고 승차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신만 교통카드를 찍고 어린이는 무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는 교통카드가 없이 탈 때에는 현금을 내야 하기에 보호자들은 어린이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어야 운수회사는 교통복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용 승객은 1인 1카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노인 무상화로 확대시킨다>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상화하거나 100원 요금제를 운영하고 점차 그 대상을 청소년과 노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노인부터 무상화하고 이후 어린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기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상화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를 이용할 때 반값을 정착시킨 후에 점차 75세 이상은 무상화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교통비 절감은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신안군은 공영버스로, 신안여객의 2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신안군 농어촌버스를 주민에게 무상화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켰다. 신안군은 2007년에 임자도에서 공영버스를 시작하여 2013년에 전체 군으로 확대시켰다. 신안군민은 공영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외지인도 1일 자유이용권(성인용 5000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 대중교통의 무상화 확대는 주민에게 복지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다.

K-패스 <https://korea-pass.kr>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이 바뀐다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승용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등을 받게 될 것이다.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달라진다>

정부가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매우 불합리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어 계산된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4.17%(주거용 일반재산은 그것의 1/4)를 곱하고, 금융재산은 긴급생활자금 500만 원 공제 후 6.26%를 곱하여 소득환산액이 산출된다. 자동차는 가액에 100%를 곱하여 소득환산액이 산출되어 자동차를 가진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일부 승용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수정한다>

정부는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는 불합리하기에 일부 보완하고 있다. 2024년에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한다. 예컨대, 경차이면서 차량 가격이 100만 원인 승용차는 소득환산액이 월 4만1700원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

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을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2024년에 2000cc 미만 차량가액 300만 원은 소득환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25,100원으로 바뀐다.

<승용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여전히 불합리하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2000cc 이상 차량의 소득환산율은 100%이다. 이 점에서 골프장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을 합친 후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누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방식’에 비교하여 매우 불합리하다.

양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12개월로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은 ‘월평균 소득수준’으로 측정하면서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연 단위’로 계산된 것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반재산에 4.17%, 금융재산에 6.26%, 승용차에 100%를 곱하고 그 합계를 12로 나누어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우면 재산을 즉시 처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현대 생활에서 차량 가격의 100%를 월 소득환산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출 기준이 바뀐다>

교육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한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 금액에 대해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30%, 결혼한 아들 가구는 30%, 결혼한 딸 가구는 15%로 산출되었다.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의 지분에 성별 차이가 없는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때 아들에게 30%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란 시각이 있어서 10%로 통일되었다.

정부는 가족간 부양양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에만 부양비를 산출하도록 바꾸었다. 노인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그중 한 명만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공제액을 늘린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근로소득·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에 소득평가액을 계산한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공제하는데, 2025년부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인 사람은 과거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소득평가액이 200만 원이었다. 현재는 75세 미만은 30%를 공제받아서 소득평가액이 140만 원이고, 75세 이상은 '20만 원+30%'를 공제받아 126만 원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65세 이상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에서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 33만 원을 타면 그만큼의 액수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빼고 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50%)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면 가장 가난한 노인 62만 명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더욱 알차게 보장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고 급여액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2025년에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노인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의 확대로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제도개선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수가 늘어나고, 생계급여액이 소폭 늘어날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에 비추어 수급자가 될 국민은 일단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혹은 가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정부가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하여 주기 때문이다. 국민이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신청하면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2023년에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부모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다>

지난해 부모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3개월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보다 적으면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 원을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만 5천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

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8.6만 원~209.3만 원)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었다. 2023년까지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바우처로 아동에게 필요한 옷이나 분유 등과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동네 가게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쓴 경우에는 카드대금으로 청구된다.

<만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을 키우는 모든 부모나 보호자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다.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주었으나 2019년부터 자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구상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영유아보육이 유아교육과 통합되면 보육예산을 아동수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다>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7세(86개월 미만)는 10만 원이었지만,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가정양육수당을 약간 더 받는다.

한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인 12월까지인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통일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은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는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손주 돌봄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그 적용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금액이 다르기에 사는 지역의 조건을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의 손자녀이다.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이며,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종일제)은 월 30만원이고, 4시간 이상(시간제)은 월 2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도입했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3개월 동안 4,351명이 신청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급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조부모가 96.5%였고, 나머지는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이었다.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원받으려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24 <http://www.gov.kr>

몽땅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사전 신청하세요

정부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모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2월 29일 16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3월에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려면 신청하세요>

사전 신청은 새 학기부터 시작될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다. 해당 아동의 부모 등은 2월 5일부터 온라인, 모바일(복지로 앱)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종류는 0~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급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유치원 이용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비 등이 있다.

이번 신청 기간 내 변경 신청 대상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로의 변경, 0~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연령 증가로 인해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기본보육, 연장보육)에서 3~5세 보육료 자격(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돼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선택할 수 있다>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인 보육료(어린이집 입소), 유아학비(유치원 입학), 양육수당(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음)을 새로 받는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가정양육으로 전환했다면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데 3월에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면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에서 0~2세 기본보육을 받는 아동이 연장보육으로 바꾸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고자 할 때에도 보육료를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유치원에 가려면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서 0~2세 기본보육이나 연장보육을 받는 아동이 3~5세 누리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 하나를 온라인, 모바일(복지로 앱)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에 로그인 후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에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 해 본인취소가 가능하다.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를 요청하기 바란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아동은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월에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변경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은 ‘당월 신청’을 하면 된다. 3월에 새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만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유치원 입학 아동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이 사전 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된다”라고 나오면, 복직후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이다.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동 나이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다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연령이 만2세(0~24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의 액수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이고, 만 1세(12~23개월)는 50만 원이다.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된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하기에 23개월 이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이 부모급여보다 많을 때에는 보육료 지원만 받는다.

자녀의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는데,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기 바란다. 복지료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신청인,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기 바란다.

<사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필요할 때 한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3월에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새로 보낼 예정인 사람은 가급적 빨리 복지료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대체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카드로 결제한다>

양육수당은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입금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된다. 현재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고 사용중이면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규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활용하면 되는데, 보육료나 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결제된다. 카드 결제 문의는 보육료(어린이집)는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1566-3232(단축번호 1번)]에서 하면 되고, 유아학비(유치원)는 0079 에듀콜[1544-0079(단축번호 5번)]에서 하면 된다.

3월 새 학기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부모나 보호자는 2월 29일 16시까지 복지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 신청’을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료 <https://www.bokjiro.go.kr>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대상 가구가 신청하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 원 증가한 4조2천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이다. 그중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1천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5천632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이다.

가구의원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3백만 원 미만일 때이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이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3년 12월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합산 소득은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위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예, 주택담보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받는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연동되어 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2,100만 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2,500만 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장려금은 조금씩 낮아진다.

<ARS전화나 모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음성·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텍스(모바일·PC),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기존 신청자가 ARS전화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음성예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쓰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하고 신청하면 '신청완료'이다. 신규신청자는 본인 휴대전화번호와 장려금을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로 신청하려면 홈텍스 누리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회원가입이 된 사람은 바로 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를 통해 인증받고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에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를 받는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한다. 환수액은 지급액+가산세(1일 22/100,000)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장려금을 제한한다.

<국세청은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 가구가 정기신청을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구성된 거주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텍스 <https://hometax.go.kr>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받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결정되면,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액이 인상되어, 육아휴직한 부 혹은 모는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4년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는 급여 인상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등이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기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 자녀의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

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고소득자에게 불합리하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액이 1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187.5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는다.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5년부터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인상해도 통상임금이 312.5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하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2024년에는 150만 원)이다.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받는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해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받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액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이었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남녀근로자는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2025년 정부예산안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중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8163억 원이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2025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8월 27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나 총수입은 39.6조 원(6.5%) 증가한 651.8조 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1조 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5조 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8조 원(3.2%) 늘어난 677.4조 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4조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96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81조 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경제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세계 각국은 정부 부채를 늘려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챙겼다. 윤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정부 세입이 준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글은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돌봄수당을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 1조8163억 원을 편성했고, 이는 올해보다 5.4% 증가된 액수이다.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며, 돌봄 대상의 연령과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

로 나누어 제공된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이고(연 600시간, 하루 2시간 이상),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월 200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이다. 특별 서비스는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천679억 원에서 내년 5천134억 원으로 455억 원 증액한다. 2024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약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2024년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천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 원에서 2021년 1천112억 원, 2023년 1천772억 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범 이후 상담 30만 건, 법률지원 9천242건, 추심 지원 5만5천988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24년 6월 기준

44.1%로 올랐다. 관련 법의 개정으로 9월 27일부터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에 도입되면 이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취약·위기가족과 청소년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천만 원 늘려 12억2.2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4만 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뀐 제도를 알고 신청하기 바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

서울특별시가 위기 징후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 서울'을 만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할이 부모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6103건이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하고,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2787건(10.0%)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위기 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한다>

최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 서울'을 위해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했다. 먼저 위기 징후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하고 촘촘한 발굴체계를 가동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위기 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연 1회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고위험군 아동은 방문하여 조사한다>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경찰·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과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및 양육여부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한다.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아동에 대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가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2022~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중부, 노원구)에서, 2024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일반사례 가정)이며, 보호자 대상 양육방법, 아동의 심리상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치료 등을 제공한다.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재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와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2024년 서울시 관내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1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0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해 전년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 2024년 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현장의견, 협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관별 협력을 공고히 했으며, 긴급 현안·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의달에 집중 홍보캠페인을 한다>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특히, 아동 이용률 및 접근성이 높은 아동급식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여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을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4월에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5월 가정의달과 11월 아동학대 예방주년을 기념하여 지하철역 내 전광판, 스크린 도어 홍보영상 표출, 시민 참여 이벤트 등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도 선제적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 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가 대상으로,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본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26일에 정답을 확정 짓고, 채점하여 12월 6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교통 체증, 장소 혼동 등 시험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여유 시간을 갖고 시험장에 도착하길 추천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이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능 대비 특별대책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수능 대비 안전 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 재난과 인파 밀집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 밀집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 및 학부모 안전관리에 나선다. 교육부는 감독관 등 수능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다.

<수능 수험생들은 각종 할인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식점, 놀이시설 등은 수험생 대상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수능 수험표로 본인 인증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혹은 가족과 함께 잘 활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호텔 소노캄은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합격 기원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뷔페 레스토랑은 수험생 본인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베이커리는 홀케이크 구매시 50%를 할인하고, 중식당은 수험생 포함 2인 이상 식사 시 탕수소스 돼지고기를 서비스로 증정하며, 카페는 본인 대상 음료 50%를 할인해준다.

제주신화월드는 ‘수능 끝, 여행시작!’ 특별 패키지를 선보인다. ‘신화테마파크’는 수험생과 동반 1인에게 빅3 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45% 할인한다. ‘신화워터파크’와 ‘신화테마파크’를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멀티티켓’은 정상가 대비 65% 할인가이다. 점심·저녁 뷔페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한다.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는 ‘광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연결한다.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은 물론, 수천 원 수준의 돈으로도 베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다리 등 미니게임을 시작해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에 빠져들었다는 청소년이 늘었다. ‘바카라’는 이제 학생이 교실에서 흔하게 즐기는 온라인 도박이 되었고,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취재 기자에게 “요즘 청소년들이 없으면 도박판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인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에게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라인에 무료 공개된 소스 코드와 약간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 지식만으로도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골자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서 초·중·고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7건을 추천한다.

<청소년에게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방송은 주택 임대차계약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이에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학교급별 우수 운영사례로 경북 구미시의 구미원당초등학교는 초6 학생 대상 인근 중학교 진로 담당교사 및 작년도 졸업생을 초청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경연중학교는 중3 대상 고교학점제를 미리 체험하는 자기주도 진로설계(고시외과목)를 개발·운영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곡정고등학교는 수능 이후 학교 자율과정 집중 운영 시기를 설정해 교과융합을 통해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www.kcgp.or.kr>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http://www.kigepe.or.kr/dicle>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5년간 인구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20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연령을 점차 상향시키면 계속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 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인력난을 대비하여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제 이송 로봇 도입,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다룬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증가될 것이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지원한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

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건강수명 대비(2021년 70.5세) 높은 기대수명(85.2세)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14.7세)이 길어질 것으로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간다.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응원한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의 출생아수는 2013년 84,066명에서 2023년 39,40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한 해에 70만 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나간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신부에 출산급여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의 1순위가 “주거”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니, 관심있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신청하기 바란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최근 고립·은둔 청소년은 늘고 있다>

고립·은둔 시기가 1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평범한 학생이던 홍길순(가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어진 따돌림에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은 5.2%이고, 이를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수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에 정부가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과 치유, 학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인 복지수급자인 고아, 독거노인 등과 달리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특성상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기에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와 주변인의 신청이나 신고가 절실하다.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한다. 고립·은둔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맞춤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

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고립·은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이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청소년안선망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 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와 시·도에 설치되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맞춤형 지원체계로 연계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고립·은둔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 지원체계로 즉시 연계한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3년에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필요할 경우 일대일 전담 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자해 위험 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운영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와 연 200만 원 이하의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소식을 반기면서도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철경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정책이 무너지면 재능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전국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정책 기반 역시 강화한다.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 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전국 꿈드림센터 200여 곳 중 12곳만 참여해 그 수가 매우 적고, 충원되는 인력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센터당 평균 3명)으로 한계가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선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과 폭력으로 은둔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고립·은둔 청소년이 이웃과 어울려 살길 기원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8회기까지 제공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증,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대 64만 원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의뢰서를 받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인정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의뢰서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심리상담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

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2400여 명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고, 경제적·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가정집 청년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도 18.3%이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부모에게 학대 혹은 버림받았다는 정서적 충격을 받은 이후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누적된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50분 이상 지속된다.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고 가격은 1회당 2급 유형은 7만 원이고 1급 유형은 8만 원이다.

서비스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무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도 무료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인 사람은 가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인 사람은 20%를,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인 사람은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초과~180% 이하인 사람이 1급 상담사에게 8회 상담을 받으

면 전체 금액은 64만 원인데, 그중 본인부담금이 12.8만 원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등은 신청서와 함께 심리상담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한번 선택하면 중도에 서비스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로 활용하고 결제되는데,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상담하는 제공인력 중 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이고, 민간자격으로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발급),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발급),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발급)이다. 2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이고, 국가기술자격으로 임상심리사 1급이며, 민간자격으로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이다.

일반적으로 1급 유형이 2급 유형보다 학력과 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높다. 예컨대, 청소년상담사 1급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청소년상담사 2급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에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만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상담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962년부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심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선도하는 정신건강 중심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방학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은 여름방학을 포함하여 연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천400여 개를 널리 알렸다.

<국립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을 비롯하여 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 우주센터(전남 고흥), 바이오생명센터(전북 김제), 해양센터(경북 영덕), 미래환경센터(경북 봉화), 생태센터(부산 을숙도) 등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레포츠 활동과 과학 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캠프를 연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2024년 어울림(林)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족캠프인 ‘어울림(林)페스티벌’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여기 평창,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과 모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평창청소년수련원을 대표하는 야외모험활동(짚라인, 인공암벽, 트리클라이밍 등)과 친환경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7월 8일 14시부터 시작되며 청소년(9세~24세)을 포함한 가족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13,800원(활동비, 5식 포함)이고 숙박비는 숙소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다. 별빛동 10평형(2~3인)을 2박 사용하면 144,000원이고, 13평형(3~5인)은 176,000원이다. 36개월 미만 유아 식비는 면제이고, 미취학 아동 식비는 50% 할인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YWA 통합예약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하수로 떠나는 가족 캠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남 고흥에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2024년 NYSC 은하수로 떠나는 우리 가족 캠프’를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로 실시한다. 고흥의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길 원하는 청소년 1명 이상 포함된 가족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가족 1신청으로 개별 신청이 원칙이니,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단위 행사이기에 옆집 친구나 아빠 친구 아들처럼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과 신청하면 안된다. 모집은 7월 9일부터 KYWA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접수 후 3일 이내에 참가비를 입금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 인원의 2배수까지 대기 인원을 받고 신청한 사람이 취소하면 대기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86,100원(1박 3식 포함)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회원가입을 하면 신청할 수 있고, 회원은 다른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캠프와 시설이용 등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캠프는 특성화 캠프, 가족 캠프, 기획 캠프, 어울림 캠프 등이 있다. 시설 이용은 학교단체, 일반단체, 당일 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어울림 페스티벌을 신청한다면, 어울림 페스티벌 신청 페이지 접속→ 공지사항 필수 확인→ 숙박장소 선택→ 참가 대상별 인원 입력→ 참가비 확인 후 결제 순이다. 혹 지금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검색하기 바란다.

<지역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지역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 문화 교류 체험활동, 템플스테이, 항공공학 관련 직업 체험, 물총 대항전 및 물총 음악 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국 대부분 시·도와 시·군·구는 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가족은 청소년센터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센터는 푸른나무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다. 이곳은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문화 감수성 및 지역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있는 센터’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행복한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노원청소년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한 힐링 쉼터 ‘나놀다 PAN’, 시원하게! 행복하게! ‘나다워터파크’가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전용 시간·요일제 ‘나놀다 사거리’에는 더위 사냥 축제, 청소년 힙합 댄스 NOM, 랜덤 플레이 댄스, 스터디 카페, 농구장 자유 이용 개방, 동아리 활동공간 확대, B-ON-TOP, 나랑노랑, 올빼미 캠프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청소년시설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전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별로 온라인접수,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존회원의 접수방식과 신규회원 접수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결제해야 최종 참가자로 확정된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북구청소년수련관은 연중(1월~12월)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 만 9세~24세 청소년은 자신의 활동 영역에 맞게 다양한 분야(댄스, 밴드, 보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된 동아리는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지원, 각종 수련시설과 연습실,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홈페이지 내 동아리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접수신청서 작성→ 청소년수련관 방문→ 담당자 교육 및 개인서명 등을 하면 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등록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에선 방학 기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학습지원과 급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2023년 연말 기준 전국 350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도모한다.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체험·역량 강화 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이다. 회원제로 운영되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가까운 아카데미에 문의하기 바란다.

<청소년시설을 방문하여 체험한다>

집에서 가까운 청소년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회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센터를 방문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수많은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갈 곳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각종 체험활동을 하면서 다른 청소년을 사귄 수도 있다. 청소년시설 이용료가 무료이거나 실비보다 싼 경우가 많다. 가까운 곳에 어떤 청소년시설이 있는지를 검색하고 이곳에서 여름방학을 보다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기 바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약 홈페이지 <https://booking.kywa.or.kr>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작년보다 11% 인상되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하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46만~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공립고의 경우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자립형사립고, 일부 사립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6만1천 원, 중학생은 65만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7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2023년에 초등학생 41만5천 원, 중학생 58만9천 원, 고등학생 65만4천 원보다 약 11.1% 오른 것이다. 종전에는 교육급여의 내용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에 교육활동지원비로 개편됐다. 이는 2022년에 전년 대비 평균 21.1%, 2023년에 전년 대비 23.3% 상승한 바 있다.

고교 교과서비는 2024년에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하며 (자립형 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이다. 올해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2024년에는 작년에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6.09% 인상되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4년에 가구원수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이하이다. 이는 2023년에 비교하여 6% 이상 인상된 것이다.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9천 명으로 2022년에 비해 9천 명 늘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기에 더 많은 학생이 선정될 것이다. 전체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에 교육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늘고 수급

자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작년보다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은 조금씩 바뀌어서 올해는 소득이 조금 높고 재산이 더 있는 사람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2023년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2023년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바뀌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의 70%만 계산하고, 특히 대학생은 월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계산하기에 근로·사업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도 신청하면 선정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2024년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기준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50% 초과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한부모 가정·차상위계층)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학생은 교육비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은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은 고교학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 학교급식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와 학교장 추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 인터넷

통신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와 한부모, 차상위가구에게 지원한다. 광주·광역시·광역시·광역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와 학교장 추천, 컴퓨터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제공한다. 전남은 고교학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 가구에게 주고, 인터넷 통신비를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제공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더 쉬운 방법은 복지로 혹은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이 있는 가구라도 새로 입학한 학생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모든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고, 신청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3월에 신청하면 그해 교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할 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하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당수는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이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세대주가 사는 집의 집세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사는 경우에는 집세가 더 많은 집을 기준으로 지원하였다. 최근 정부는 청년 세대원이 세대주와 별도 집에서 사는 경우에 양쪽의 집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학생이나 청년이 세대주와 따로 살면서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비원클릭 <http://oneclick.neis.go.kr>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1학기에 대학교를 다닐 재학생과 입(편)학할 사람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11월 21일부터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25년 1학기에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1월 21일 9시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재학생, 복학생은 물론이고 2025년에 다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 2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동의와 서류제출은 11월 21일 9시부터 2025년 1월 2일 18시까지이다. 본인이 신청했다라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도 가능하다. 입학(편입학) 예정자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때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금액만 고지되기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 또한, 많은 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추가로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수준을 알 수 없기에 교내장학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예컨대, 한 대학교는 2025년 1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인데, 신입생이 소득분위 1구간으로 285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65만 원, 4구간으로 21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140만 원, 7구간으로 175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장학금 175만 원을 지급한다.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내 장학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25년 1학기에는 9구간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

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70% 이하는 3구간, 90% 이하는 4구간, 100% 이하는 5구간, 130% 이하는 6구간, 150% 이하는 7구간, 200% 이하는 8구간, 300% 이하는 9구간, 300% 초과는 10구간으로 구분된다. 202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고, 1~3구간은 285만 원, 4~6구간은 210만 원, 7~8구간은 175만 원까지이었다.

2025년 1학기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초과~3배 이하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이었기에 소득인정액이 월 11,459,826원(연 137,517,912원)을 초과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기에 월 18,293,319원(연 219,519,828원)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지금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대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고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속 대학과 가족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학적(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2024년 2학기에 신입·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025년 1학기에는 ‘재학생’이다.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되고,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번,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다수의 학번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학번이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신청학번과 불일치하면 원활한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자나 취소 희망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대학 홈페이지-학생서식-장학금-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미혼은 부모가 기혼은 배우자가 동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공적 자료로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수준 등을 파악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번 부모나 배우자가 동의하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계속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이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서류제출대상자로 뜨면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된다. 모바일 기기에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를 해도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업로드를 하기 바란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특히,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신청자가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24에 가입하여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에 맞아야 받는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에 맞고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신청하는 학기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편)입생은 전적 학기의 성적이나 수능점수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만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학생(본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이 없고,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에 제한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고,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재학생은 C학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가 있다. 따라서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평점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이면 경고 후 2회까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기준 등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살펴보기 바란다. 대학생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기에 성적을 80점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대학교(원)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이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된다.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이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이다.

학자금대출제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한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가능하다.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지만,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로 불가능하다.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하고 등록금대출을 실행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한다.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능하다.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이다. 자발적 상환은 1회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이 있다. 자동이체방식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이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7%(변동금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인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된다. 상환 유예기간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학자금대출 관련 다른 사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학자금대출은 매 학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학기 중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0월 24일 18시까지이고, 생활비대출은 7월 3일 9시부터 11월 14일 18시까지이다. 신청기간에는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같은 해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예컨대, 서

울특별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만9천394명에게 총 19억990만 원(1인 평균 약 10만3천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의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는 전국 대학교(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지만, 다른 시·도는 관내 대학교(원) 학생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에 속한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대학(원)생은 소득수준 제한이 없다.

<광주광역시 9월에 신청받는다>

광주광역시는 9월에 2024년 1학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다.

9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2017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지원방법은 발생한 이자금 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한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이므로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2학기 신청은 2024년 9월초부터이다. 학생 본인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등의 순으로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제출은 제출서류 일체 스캔→ 1개의 PDF파일로 결합→ 압축 후→ 업로드(파일명: 신청자 이름)하고,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대학생도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해야 지난 학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청년은 문화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마다 사업 이름, 지원 조건, 사용방법 등이 다르기에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남은 시·군을 통해 3월 한 달간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월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부터 25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2년 3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사이(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들이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남 도내에서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학원 수강, 공연 관람, 숙박시설 이용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광주은행(시거주자)과 농협카드(군거주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선정자도 올해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기 위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원 등), 복지혜택 수령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는 별도 지원금 13만 원을 제외한 1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원받은 문화복지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이용권(포인트)은 소멸된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의 이용자 만족도는 높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는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19세에서 28세까지)이 신청만 하면 ‘소득기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서울청년문화패스’와 다르다. 신청 마감일 3월 31일이니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시지역 거주자는 광주은행에 군지역 거주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는 본인이 원칙이지만,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접수할 수도 있다.

전남문화복지카드에 대한 청년의 호응은 뜨겁다. 2023년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9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더 확대하길 희망했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5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처도 기존

34종 2만여 가맹점에서 38종 3만여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23세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2001년~2004년생인 20~23세 청년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것이다. 해당 청년은 신청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을 누리기를 바란다.

지원대상은 20~23세 청년 신청자 중 선정된 약 3만 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혹은 외국인등록대장상으로 서울 거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신청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2023년에 최초로 지원받은 사람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가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월소득 334.3만 원이고, 2인 가구 552.4만 원, 3인 가구 707.2만 원, 4인 가구 859.5만 원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67.5만 원, 2인 가구 442.0만 원, 3인 가구 565.8만 원, 4인 가구 687.6만 원이다. 가구원수가 많아지면 기준중위소득의 금액도 높아진다. 소득수준은 신청자가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고, 신청시에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서 주민등록사실여부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후”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자는 이렇게 선정된다>

서울 청년이 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하면, 5월 8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한 사람이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1인당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에 처음 패스를 받은 사람은 12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될 것이다. 자격요건에 부합하였다도 부정확한 신청인 경우는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액이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하기 바란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공연예술 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 20만 원 문화이용권 카드를 지급받는다. 단 신청자가 신한은행 계좌를 개

설하고, 서울청년문화패스 헤이영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이다. 가입과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가입은 본인이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몽땅정보통 신청시 사용한 아이디로 입력한다. 비밀번호 초기화를 눌러서 계정 설정을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발급은 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은 신한 쏘, 플레이, 알파, 스퀘어 중 사용하는 앱을 선택한다. 신한 플러스가 처음이라면 원하는 앱을 설치한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하고,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면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 후 2~3일 내로 20만 포인트가 충전된 실물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하여 예매가 가능하다. 연극,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뮤지컬, 국악,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문화 예술 공연 프로그램은 다원영의 악의 기원,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등 12편이다. 예매방법은 공연·전시 예매 페이지로 접속하고, 보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여 포인트로 예매하기를 클릭한다. 관람하고 싶은 날짜와 회차, 자리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카드 종류를 신한카드로 클릭하여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예매 건당 7만 원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다른 혜택도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세 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는 소문난 공연 소식과 함께 인기 있는 전시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다. 둘은 숨은 혜택 맛집인데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은 쏟아지는 이벤트로 공연 전시 예매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지 않고, 시·도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많다. 청년사업은 예산 할당액 안에서 기획된 것이 많기에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신청자 중 선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은 시·도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검색하기 바란다. 만약, 참여하고 싶은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문화카드를 받지 못한 청년은 해당 시·도에 관련 사업을 요구하기 바란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요구해야 얻을 수 있다.

전라남도청년센터 <http://www.jnyouthcenter.kr>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통장 가입자는 연 4.5% 이자소득을 받고 비과세이며 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까지 연리 2%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새 청약통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가입하고, 회당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소득 기준 3600만 원보다 완화된 5000만 원까지이다. 금리도 최대 4.3%에서 4.5%로 높였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된다. 전환 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기준에 맞으면 전환할 수 있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도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될 수 있다. 가입자의 소득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소득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한 언론사 기자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에 '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험을 기사로 썼다. 그의 일반청약통장에는 33번의 회차 동안 넣은 약 330만 원이 있었다. 납부 기간동안 받은 이자(약 5만 원)는 해지 과정에서 돌려받고, 원금은 기존 납입금액과 기간이 인정된 채로 드림청약통장으로 이전됐다고 한다. 갈아탄 경우에는 새로 드림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청약통장은 금액과 기간(회차)이 중요한 만큼 갈아타기 전 일반청약통장 미납회차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전환 후에는 미납회차를 만회할 수 없어서다.

특히 국민주택 청약에 노리는 청년이라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선순위 판정에 중요하다. 미납한 횟수가 있으면 그 횟수만큼 미납금을 납입한 뒤 전환 절차를 밟는 것이 이익이다.

<연 금리 4.5%까지 이자소득이고 비과세이다>

드림청약통장은 연 금리 4.5%까지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년 이상 납부하면 연 2.8%)에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우대금리 1.7% 포인트를 더해, 최고 4.5%까지 적용(원금 5000만 원 한도)한다.

정부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300만 원까지)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이 비과세 혜택까지 신청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비과세 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주로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인데, 비과세 대상은 바로 확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판단 후 대상 여부를 추후 알려준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최소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여기에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후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나 만기는 최장 40년, 금리는 소득·만기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로 예정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 이상인 점에서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주택이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청약에 도전한다면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인다>

무주택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확정되지만,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중장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이 출시되면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웃돈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정부의 주요 정책 재원이 되는 세금 납부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이다.

아이 셋 키우면서 대출금 이자 내고 먹고 살다 보니 집 한 칸 없다는 홍길동(가명)씨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은데 죽을 맛”이라며 40대도 지원을 해달라고 토로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제외되고 있는데 따른 불만과 함께 이런 정책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 둘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힘듭니다”, “아이 둘 아빠입니다. 40대는 사람도 아십니까?”, “총선 앞두고 청년 혜택만 나오네요”, “자녀 양육하는 40~50대 중년들은 등골이 휩니다. 중간에 끼어서 고생만 하는 세대라니까요”, “이 나라에는 청년만 산답니까. 세대 간 갈등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등 중장년층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무주택자들은 월세나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새집을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늘리고 특별 분양의 기회를 확대하길 기대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주택의 총량을 늘리는데 인색하고, 한정된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하여 청약할 기회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 늘리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주택드림청약주택도 청년에게 더 많은 예금 이자를 주고,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이자로 주는 것이다. 은행은 주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수익을 내기에 청년이 이익을 본 만큼 다른 세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을 늘리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https://www.molit.go.kr>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자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1,091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근 정부는 6년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입주물량은 총 1,091호이고 그중 신혼·신생아 월세형이 317호이고, 든든전세가 774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월세형이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중 하나에 속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11.01.~2024.10.31.)인 사람이고,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1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이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1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이고, 신생아 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1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며,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

혼부부이고, 4순위는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고,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은 11월 29일이며, 서류접수기간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당첨자발표일은 2025년 2월 3일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와 공급호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송인에스하임, 32호), 중랑구 망우동(망우블리체, 23호), 묵동(까사에이, 15호), 묵동(양지쉐르빌, 10호), 양천구 신월동(동트리움, 34호), 영등포구 대림동(포엠빌, 24호), 송파구 오금동(시온스타빌, 23호), 부천시 고강동(행복마을, 15호), 송내동(LOFT아파트먼트, 66호), 안산시 본오동(숲속정원빌, 8호), 본오동(파크애비뉴, 8호), 부곡동(갤러리아임, 8호), 와동(대명하이빌, 15호), 월피동(노블리안, 16호), 일동(행복아트빌, 12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조은허브빌, 8호) 등 총 317호이고 936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한다. 접수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고,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은 11월 14일이며, 서류접수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당첨자발표일은 12월 16일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재계약 3회 가능하여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90% 이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내역을 확인하기 바란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분양전환 불가 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주택목록의 분양전환 가능여부 확인 후 청약신청하기 바란다.

주택 소재지와 공급호수는 경기도 김포시(9호), 부천시(28호), 수원시(78호), 시흥시(4호), 안산시(1호), 안양시(10호), 여주시(69호), 용인시(26호), 이천시(12

호), 경남 김해시(3호), 창원시(47호), 경북 경산시(13호), 구미시(3호), 광주광역시 남구(1호), 동구(7호), 북구(5호), 대구광역시 동구(28호), 북구(11호), 수성구(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5호), 강서구(11호), 광진구(1호), 금천구(44호), 노원구(1호), 송파구(1호), 은평구(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244호), 미추홀구(73호), 서구(60호), 연수구(1호), 충남 아산시(27호), 천안시(23호), 충북 청주시(2호) 합계 858호이고, 2,137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의 위치와 크기가 다르기에 해당 주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인 가구 541만 원, 3인 가구 719만 원, 4인 가구 824만 원이고, 그것의 200%는 각각 1,083만 원, 1,439만 원, 1,649만 원이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는 연소득 1억7,269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매년 인상되기에 6년 후에는 2억 원인 가구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있는 사람은 LH청약플러스를 검색하기 바란다.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첫 ‘자가진단표’를 개발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지역 청년도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129번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를 설치했고, 개소 후 9개월간 300여 명의 청년에게 620여 건의 맞춤형 상담을 펼쳤다.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8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기구는 2024년 4월 기준 가족돌봄청년 293명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천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시가 지난해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등 순이었다. 이밖에 추석 선물 세트와 임플란트 비 지원 병원 연계 등도 제공됐다.

<자가진단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배포하고 홍보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전담 기구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 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초·중·고교 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자가진단표에는 직계혈족 등 청소년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부모, 형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풀어쓰고 가족을 돌보는 활동과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수록했다.

서울시가 정한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 부담상황에 직면한다. 갑작스런 돌봄의 시작으로 미래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체크

리스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청년은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 가족돌봄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모두에 해당되면 서울시복지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 재단은 신청기준에 맞으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해당, 비해당; 이하 같음]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은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필요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서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야 한다.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민법상 가족은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즉,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으면 해당된다.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직접 서울복지재단에 신청(상담신청서 작성, 전화 활용)하거나 유관기관(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학교, 병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최근 이 사업 3단계 참여자는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1월 2~12일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총 1만197가구가 신청했고 무작위 추첨과 소득·재산 기준, 설문조사 등을 거쳐 492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 보장 실험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1인)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5월부터 민간과 연계한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등 총 4억8천만 원 규모의 자원을 지원받을 청년을 모집한다. 6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삶을 제대로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등도 운영한다. 심리지원 물품을 담은 ‘나 돌봄’ 키트도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의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광주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시범 단계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과 지원내용이 다르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등록상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달 25만 원씩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달 생계급여를 받기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돌봄수당을 신청하면 서구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시설 및 기관, 교육청과 대학, 병·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서구는 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 구성,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지원대상 청년의 연령,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https://www.welfare.seoul.kr>

광주광역시 서구 <https://www.seogu.gwangju.kr>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2024년도에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으로 지난해 202만 원보다 11만 원(5.4%) 올랐고,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40.8만 원으로 지난해 323.2만 원보다 17.6만 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아서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최대액도 인상이며 노인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 수급자의 90% 가량은 최대액을 탄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5.4% 인상되었지만, 기초연금액은 3.6%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소득평가액과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과 전혀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적게 산출된다.

기초연금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이는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월 11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은 근로소득만으로 볼 때 4,142,857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만 원은 맞벌이일 경우에 7,068,571원일 때이다.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노인부부가 각각 353만 원 가량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 방식도 조금 바뀌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어떤 노인이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논란이 많았던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개선되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한도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기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한도액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7억7400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1억574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노인가구는 적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면 소득평가액이 산출된다. 특히, 자신이 젊은 시절에 내고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부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탈 수도 있다>

간혹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탈 수 없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헛소문

이다.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만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을 타면 기초연금 최대액의 50%까지 감액될 수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기에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퇴직연금(유족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타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다라도 퇴직연금을 탈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일시금을 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을 검색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에 65세 이상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다시 신청해봄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 원"은 당분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세하여 세수가 크게 줄었기에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노인이려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집과 같은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

<정부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 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좀 더 세심한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학교, 병원과 같이 중앙에 복도가 있고 좌우에 여러 명이 이용하는 방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조는 소수 인력이 다수를 관리하기 쉬운 방식이다.

그런데,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생활단위 공간(9명 이내)을 중심으로 내 집과 같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유니트케어는 아파트 몇 개를 모듬으로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 유니트는 가족 구성원이 침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구조와 유사하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노인과 가족(보호자)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니트케어는 한국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일본에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고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치매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노인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습성이 있다. 현재 대형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조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트케어가 도입되면 특정 직원은 특정 유니트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원은 유니트에 사는 노인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노인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유니트케어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과 같다>

시범사업에서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시설 이용 비용은 하루 8만4천240원, 한 달 252만7천200원이다.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50만5천440원이다.

하지만, 유니트케어의 도입은 시설설치비와 관리비를 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연면적으로 입소정원 1인당 20.5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침실은 1인실 9.9, 2인실 16.5, 3인실 23.1, 4인실 29.7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인실은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9인 정원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면적은 3인실이 3개면 69.3제곱미터 이상이지만, 1인실 9개를 마련한다면 89.1제곱미터 이상이다. 여기에 공유공간을 포함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의 필요 공간이 늘면 건축비가 늘고, 광열비 등 관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를 본사업으로 수행할 때에는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식대를 요양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니트케어가 표준이 되면 요양시설 이용료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를 요양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때 병원에서도 식대는 전액 자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의 수가로 포함되어 있다.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이 20%이지만, 식대의 본인부담 비율은 50%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이용자의 식대를 수가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 비율은 50%가 적정하다.

현재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기저귀, 물휴지 등도 점진적으로 보험수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 항목으로 바꾸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로 시설 거주율을 낮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와 함께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노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으면서 음식물 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약물복용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해 건강수명을 늘리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비를 피할 수 있다.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수면 취하기,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근력운동을 하기 등이다. 특히 근력운동은 골밀도, 신진대사, 기분, 면역체계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풀업 등은 언제 어디서나 장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이다.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15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4년에는 12.95%로 인상되었다. 매년 평균소득과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피보험자 보수월액의 0.918%이다. 정부는 공적 부담의 강화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자격과 관련해 변화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의 계획이 잘 구현되어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늘었지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6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하루 당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만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3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 대비 12.2% 늘었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해 증가했다. 신고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3년 2만1,936건,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각각 늘었다.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등이다. 그중 성적 학대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데 가림막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고, 방임은 약이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으로 86.5%를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

(9.7%)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노인학대(229건) 발생 장소는 가정이 204건(89.1%)이었으며 공공장소 11건(4.8%), 복지시설 6건(2.6%), 요양병원 5건(2.2%) 등이었다.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므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 순이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상승하고 있다. 아들 비율은 2020년 34.2%에서 2021년 27.2%, 2022년 27.9%, 2023년 26.3%로 낮아졌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으로 여성 364명(12.9%)보다 훨씬 많았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이거나 아들에 의한 부모학대이다.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는 줄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난 것은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23.6%를 차지했고 70~74세(22.4%), 75~79세(19.3%) 등이다. 69세 이하 노인은 2021년 1,428건(21.1%)에서 2022년 1,467건(21.6%), 2023년 1,655건(23.6%)으로 그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 젊은 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노인 학대는 늘고 재학대는 감소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약 50% 정도 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1,092건(16.1%)에서 2022년 1,170건(17.2%), 2023년 1,214건(17.3%)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가 늘어날 추세이므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경찰 등은 노인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지만,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쉼터는 20곳에 불과하다. 쉼터당 정원도 최대 9명에 그치고, 보호기간도 6개월로 제한돼 피해자는 보호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다.

한편, 재학대는 2023년 759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재학대는

2020년 614건에서 2021년 739건, 2022년 817건으로 증가되다가 2023년에 759건으로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었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천589회로, 2022년(20만3천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천402회→16만9천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천482회→5만6천116회) 늘었다.

노인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노인학대 상담전화인 1577-1389 혹은 스마트폰 앱(나비새김)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녔기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정이나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나비새김 <http://www.navi1389.or.kr>

치매, 이렇게 대처합시다

통계청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994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8월에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치매 유병율은 10%대이므로 약 100만 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2023년 9월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7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923명(10.3%)이다. 지역별 치매유병률은 전남이 12.2%로 가장 높고, 전북과 충남이 각 11.8%로 두 번째,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치매 유병률이 더 높았다.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60세 이상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이 ‘건망증’ 수준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잊어버리는 것’인데, 본인이 잊어버린 것을 알면 건망증 수준이지만,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했다”고 탓하면 치매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치매선별검사를 받기 바란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받아서 ‘인지 저하’로 나올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을 통해 전문의 진찰과 신경심리검사,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등을 무료 또는 검사비를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다. 스스로 종합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자부담’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아 소견이 나온 후 추천받아 협약병원으로 가면 무상 혹은 소액의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가 의심되면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조기 치료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진료비를 연 36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부합하는 경우 월 상한 3만 원 내에서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치매약을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인 사람(혹은 가족)이 해당 시·군·구를 포함하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 처방전, 통장 사본 1부 등을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2022년 21만6937명이고,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1만 원이었다.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에 선별적 지원은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 치료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남 목포·순천, 경기 안성·양평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거주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치매환자의 조기 발발을 위해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경찰서에 등록하면 실종시에 빨리 찾을 수 있다>

치매환자는 배회하는 습성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배회하다 보면 원하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치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치매환자가 실종될 때 신속하게 찾는 방법으로 ‘치매노인지문 사전등록제’가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지문으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와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하면 찾는데 도움이 된다>

치매노인의 경우 잠시 외출한 뒤 길을 잃어 집을 찾아오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길을 잃은 경우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배회감지기란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있어 치매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

호자가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 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3만692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실종자의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배회감지기는 목거리형, 손목시계형, 매트형이 있다. 그중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치매노인의 동선과 현재 위치 등을 미리 설정해두고 이 위치를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면 일반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 감경대상자는 6~9%의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일부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한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진단받고 약물관리를 잘하면 10년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진단을 꺼리고 약물관리를 하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가 악화되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가급적 빨리 개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본인이 치매가 우려되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질병 치료 계획을 가족이나 보호자와 상의하고, 사전연명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꼭 필요할 때 시설급여를 활용한다. 막연하게 치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노인 인구 1천만 명, 치매 환자 1백만 명 시대에 치매의 관리는 필수이다.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안전 Dream <http://www.safe182.go.kr>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와 연금급여액도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37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이었는데, 7월부터 39만 원에서 617만 원까지로 인상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였고, 같은 달 23일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생활수준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을 보면, 자격취득과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한다.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인 1988년 11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7만 원에서 상한액 200만 원까지이었다. 소득수준은 높아지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지 않아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199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을 22만 원으로 상한액을 36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하한액을 23만 원으로 상한액을 368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였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향후 노령연금 등도 인상되어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즉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이다.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 원을 적용받는 사람은 월보험료가 3만3300원이고, 상한액 590만 원을 적용받는 사람은 53만1000원이다. 2024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390,000원×9%)이고,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6,170,000원×9%)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연금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연금급여를 더 많이 타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데, 모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기본연금액도 인상되는 구조이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연금액=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이다. 그중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한다. 장애연금의 지급률은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이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을 70%로 했다(1988~1998년), 60%로 변경하였고(1999~2007년), 2008년에 50%로 바꾸고,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시켜(2008~2027년), 2028년 이후 40%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이 연금액을 좌우한다>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B값)의 평균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B값은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므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 여기에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가 길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은 2,989,237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A값도 인상되어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도 증액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연금은 A값과 B값의 평균치에 좌우되기에 월급이 적더라도 좀 더 오래 보험료를 내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가 20년 이상 가입시 100만 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4.3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 원)은 2.2배, 590만 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더라도 대부분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과 같다.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상한액의 변경으로 월 590만~617만 원 사이 직장인은 본인 기준 최대 월 1만2150원의 연금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국민연금의 핵심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나의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상되는 노령연금액도 알아보자.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귀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되길 바라는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정부가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급여를 낮추어서 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달 내는 돈은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내고,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은 2% 포인트 더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데 연령대별로 인상율을 차등화하겠다고 한다. 현재 50대는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되고, 40대는 0.5% 포인트씩 8년 동안, 30대는 0.33% 씩 12년 동안, 20대는 0.25% 포인트씩 16년 동안 보험료율이 올라 2040년에 13%를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올해 수준인 42%로 하겠다>

정부안은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시 40%로 낮추지 않고 2024년 수준인 42%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70%이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60%,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이 되면 40%가 될 예정이다.

정부가 처음 약속한 소득대체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진 이유는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당시부터 예상되었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에 소득대체율이 70%인데, 초창기 가입자 중 중년층은 60세까지 가입해도 4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35%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다시 50%로 낮춘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2028년에 40%가 되도록 설계했다. 2024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소득대체율이 42%인데, 국가안은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에 보험급여의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3%로 인상하고 50%를 받길 희망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50%로 인상하자고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이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보고, 당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런데,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하여 매달 보험료를 44.4%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노령연금액을 5% 인상하는 것에 그친다. 예컨대,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 원을 받지만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될 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4.4% 인상하면서 보험급여는 5% 더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깎겠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를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것이다. 장기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인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상당액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주식의 시장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재정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면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이것은 추계일 뿐이다.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의 평가액은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다.

정부는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물가상승율만큼 다음 해 노령연금 등에 반영해주고 있다. 예컨대, 2022년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22년에 물가가 5% 상승하면 2023년에 105만 원을 받고, 2023년에 물가가 3% 상승하면 2024년에 108만15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가 3% 인상되더라도 가입자수가 0.5% 줄고,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1.0%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물가가 3% 상승하면 다음해 103만 원을 받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5만 원만 받게 될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에 평생 동안 받는 총액은 더 많다고 하지만, 매월 연금액은 물가상승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활수준은 떨어질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의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될 것인가>

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중심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두고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소득보장제도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국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주인으로서 의견을 당당하게 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외국인 1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운 뒤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이고, 두 명 중 한 명은 중국인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 명 이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하다.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2019년 164억7천만 원에서 2023년 478억8천만 원으로 거의 3배가 됐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날 것이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267억8800만 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53.5%)이다. 이들은 상반기 중 101억700만 원을 받았고, 1인당 181만 원 꼴이다. 미국인 2276명(21.9%)에게 81억7900만 원이 지급됐고, 미국인 1인당 359만 원 꼴이다. 이어 캐나다인 867명(8.3%)에게 34억3000만 원(1인당 396만 원), 대만인 585명(5.6%)에게 18억9400만 원(1인당 324만 원), 일본인 426명(4.1%)에게 11억4700만 원(1인당 269만 원) 순이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왜, 외국인에게 수백만 원씩 노령연금을 주느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다. 중국인은 상반기(6개월 동안)에 1인당 181만 원을 받았기에 월평균 노령연금은 30.2만 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치(남성 75.6만 원, 여성 39만 원)보다 훨씬 적다.

<외국인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연령과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판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단,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을 갖추 때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1급, 2급, 3급, 4급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 4급은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기본연금액 100%는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같다.

<외국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4년 6월 말 402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200만 원이었다. 중국인 1701명(42.3%)이 28억74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아 가장 많았다. 1인당 169만 원(월평균 28.1만 원) 꼴이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600만 원(1인당 월 35.8만 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600만 원(1인당 월 47.5만 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500만 원(1인당 월 33.6만 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800만 원(1인당 월 34만 원)을 받았다. 2019년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2802명이었다.

<반환일시금을 타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가 받아 간 반환일시금은 2023년에 3천294억2천만 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적별로 반환일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인 가입자 1만5

천151명은 전체 반환일시금의 26%에 해당하는 854억5천만 원을 받았다. 다만 중국인 가입자의 1인당 수급액(560만 원)이 가장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1인당 반환일시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은 태국인으로, 각자 1천364만 원을 수령했다. 스리랑카(1천331만 원)와 인도네시아(1천258만 원), 미국(1천43만 원) 노동자들도 2023년에 1인당 1천만 원 넘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액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반환일시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4794명이다>

지난 4년반 동안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 원이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2024년 6월 말에는 45만5839명으로 41.6% 늘었다. 그중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2% 늘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4241명으로 전체의 42.6%이고, 그 다음은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은 2022년, 캄보디아인은 2023년 각각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이 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타는 사람도 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5175명이 외국 연금(미국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타듯이 한국인도 외국의 공적연금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폐지수집 노인의 지원대책은?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약 1만5천 명이고,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이다.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3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이들이 좀 더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폐지수집 노인은 약 1만5천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5월 전국 시·군·구 단위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상황을 조사한 결과 1만4831명이고 전체 노인의 0.15%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시·도에 폐지를 줍는 노인도 많았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다. 연령대별로 80~84세가 전체의 28.2%로 가장 많고, 다음은 75~79세(25.2%), 70~74세(17.6%)로 70세 이상이 71.1%이었다. 이들은 은퇴 후 십 년이 지나도 빈곤에 허덕이며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은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다. 2024년 7월 1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은 여성이 557.2만 명(55.6%)이고, 남성이 442.7만 명(44.4%)인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많고, 기초연금 등만으로 생계가 어렵기에 폐지를 줍는다.

<평균 소득은 월 76.6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의 비중은 늘어난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취득한 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모두 합친 월평균 소득은 76.6만 원이다. 월 소득의 분포는 5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고, 이어서 7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이 13.9%, 6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 13.3%였다.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후에 혼자 살면 최저생활비가 월 124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소득은 그것의 61.8%이다. 3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최저생활비의 55% 수준에서 사는 셈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재산 규모는 2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5.2%로 가장 많고, 평균 재산은 1.2억 원(부채 제외)이었다. 비싼 주거비와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하기 어렵다.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89.7%로 전국 평균 수급률(67.4%)보다 훨씬 높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8.4%인데, 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9.1%)의 3배를 넘는다.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1인당 257,840원)까지이다.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의 최대액을 받으면 월 평균소득 76.6만 원의 43.7%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 중 28.4%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받을 수 없다. 법률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 독거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713,102원을 받고, 기초연금을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다.

<10명 3명 이상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폐지수집 노인 중 4787명(32.2%)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이 71.7%로 가장 많고, 민간형 노인일자리인 ‘자원재활용사업단’ 참여자는 1141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37.3만 원의 급여를 받아 폐지수집 활동 수입(월 15.9만 원)보다 2.3배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126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7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95명 추가로 발굴되었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담당기관이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시민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폐지수집 노인은 전수조사 통계보다 많다>

서울특별시가 5월 24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뒤 자체적으로 보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총 3007명이었다. 이는 복지부에 보고한 2530명보다 477명(18.8%)이 많은 수이다. 보완조사 결과 폐

지를 줍는 노인 중 여성은 1839명(69%)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1412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1231명(41%), 60대 364명(12%)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액은 89.5만 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12.9만 원 많았지만, 높은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생활은 어려울 것이다.

이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84%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이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49%이고, 일자리 참여소득은 월 30.5만 원이었다.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은 전국에 비교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낮지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조금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찾기부터 건강과 성향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인들은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38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이는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정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받으면 가장 가난한 노인의 소득을 월 33.4만 원씩 높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해 ‘약자복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중장년층은 50플러스센터를 활용하세요

중장년층 혹은 신중년 세대(50~64세)가 생애를 다시 설계하길 원하면 50플러스(50+)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시·도는 50+센터를 운영한다.

<중장년은 50플러스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서울시 중장년 세대(만40~64세)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출연기관이다. 이 재단은 2016년 4월, 베이비부머, 신중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을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2년 12월에 ‘서울런4050’을 발표하여 2023년부터는 만40~64세로 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다.

이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의 연구소이자 지원본부로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사회공헌, 직업교육, 생애설계를 지원한다. 현재 중장년층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취업컨설턴트가 경력 설계부터 이력서·면접 코칭은 물론 일자리 매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76개 과정을 운영한다. 그중 경력 설계 프로그램은 42개 과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34개 과정이다. 구직 중이거나 경력 설계에 관심 있는 4050 서울시민이라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50플러스포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50플러스재단은 구직활동 중인 중장년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올해 봄 기업별 채용설명회 일정은 공방일자리 3월 21일, 한국맥도날드 3월 22일, 쿠팡풀필먼트 3월 28일, 세스코(홈케어프로) 4월 18일 등이었다. 50플러스재단은 올해 2천 명 참여를 목표로 채용설명회를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37차례 열린 채용설명회에 1천397명이 참여해 21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재단은 서울 대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도 공동 모집했다. 보람일자리는 어르신 급식 등 복지 분야,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 문화시설 공간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문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67세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단은 취업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장년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개발’과 ‘4050 직무훈련’도 제공한다. 취업이나 취업 역량개발에 관심 있는 중장년은 ‘50플러스포털’을 자주 클릭하고, 희망하는 사업에 신청하기 바란다. 18개 50플러스센터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무료 혹은 실비로 신청하여 학습할 수 있다.

<부산시는 50+생애재설계대학을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는 신중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50+생애재설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퇴직 등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50~64세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된 생애재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2017년 부산대와 동의대를 시작으로, 2023년에 선정된 경남정보대학교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포함해 총 10개 대학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8개 대학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공모를 거쳐 부산대, 동의대, 신라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경상대, 대동대, 부산외국어대, 동의과학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부산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챗지피티(ChatGPT)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동의대는 드론 조종·항공촬영 기술, 민간·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인 무인항공기(드론) 종합기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했다. 신라대는 귀농 귀촌과 도시농업을 적용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실용 교육’을 운영하고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웰니스 케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빛고을50+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빛고을50+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2(학동), 옛 학운119 안전센터에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점심시간 12~13시)이고, 상담·문의전화는 062)228-5050이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에 학동·증심사입구역 4번 출구이고, 시내버스는 학2마을 아파트 혹은 삼익세라믹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빛고을50+센터의 주요 사업은 50+생애 재설계 상담, 50+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계, 50+생애전환 교육 등이 있다. 그중 50+생애 재설계 상담은 일, 여가, 건강, 재무, 관계 등 생애 재설계 전문가 상담, 서로를 잘 아는 동년배 상담, 경력분석, 욕구진단을 통한 생애 컨설팅으로 이루어진다. 50+정보제공은 장년층 지원사업 종합 정보 One-stop 제공이고, 전문기관 연계는 일자리, 재취업, 창업교육, 정신건강, 재무설계 등 전문기관 One-stop 연계이다. 50+생애전환 교

육은 50+세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규교육과 50+세대의 관심사와 선호에 따라 상시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정규과정은 인생학교(자아탐색, 사회관계형성, 단체활동경험), 노후준비아카데미(건강, 여가, 재무, 일, 대인관계), 건강아카데미(신중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건강교육), 사회참여프로젝트(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과정) 등이다. 상시과정은 100세시대 트렌드특강, IT교육, 디지털전환교육, 취업코칭서비스 특강으로 장년층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전략, 면접이미지메이킹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빛고을50+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50+센터 일, 사회공헌활동은 빛고을50+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연계와 역량과 경험을 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3월부터 모집하여 12월까지 활동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45세~64세(2024년 기준 1960년~1979년생)가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광주형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추진하는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운영지원이음파트너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운영관련 및 회계보조, 복지시설 업무보조이고;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는 전통시장의 보안, 순찰활동, 시장의 운영활동 보조지원이며; 꿀잼도시 광주온라인 홍보지원단은 소상공인 업체 제품 및 서비스 온라인홍보이고; 빛고을 출장조리사는 공동생활 쉼터 등 취약계층에게 균형 있는 식단으로 찾아가는 조리서비스이며; 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는 폭력 가해 및 주취난동 등 악성 민원에 노출된 인력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 제공이고; 책놀이활동지원단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 프로그램 강사활동이며;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은 무등산국립공원 산불 및 재난감시, 안전한 탐방환경을 위한 활동이고; 50+문화시설지원단은 문화시설 서비스 향상과 이용객 안내, 관리운영 등이다.

빛고을50+센터는 당사자 주도 커뮤니티구성 운영지원과 50+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빛나는 날나리 만보, 생활영어동무, 인이회, 현위의 노래, 어울림, 프랑스자수, 인생이모작클럽 등 동아리가 취미생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50플러스포털이나 50+센터를 검색하기 바란다.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

빛고을50+센터 <http://www.gj50plus.or.kr>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1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하는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다.

<12월 27일까지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지만, 내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전국 공통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 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2025년 노인일자리는 109.8만 개다>

정부가 구상한 저소득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공익형 일자리는 65.4만 개인데, 2025년에는 69.2만 개로 3.8만 개가 확대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24년 15.1만 개에서 2025년 17.1만 개로 2만 개가 늘어나며, 민간형 일자리는 2024년 22.5만 개에서 2025년에 23.5만 개로 1만 개가 늘어난다. 전체 노인일자리는 2024년 103만 개에서 2025년 109.8만 개로 6.8만 개가 늘어난다.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노인이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이다.

<일부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유형 중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가 해당 연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가구

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에는 60세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아직 노인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도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에만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유형마다 근무조건과 급여가 다르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중 노인공익활동사업에는 노노케어, 공용주차장관리지원, 전기차충전소관리지원, 우리동네공공환경지킴이, 깨끗한동네만들기, 복지시설도우미사업, 사랑나눔도우미, 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플라스틱재활용업, 체육시설지원사업, 경로당급식지원사업, 초등학교스쿨존교통지원사업 등이 있다. 초등학교스쿨존교통지원사업은 등교시간에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고, 노노케어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한 달에 10일, 하루에 3시간씩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다.

노인역량활용사업에는 노인맞춤돌봄지원사업, 유아언어발달촉진지원사업, 노인시설지원사업, 공공도서관업무지원, 커피박새활용교육사업, 어린이집보육지원사업, 소비자지킴이사업, 소방안전지킴이사업, 금융업무지원사업, 교통데이터조사단사업, 석유에너지파수꾼사업, 드림컨설팅사업, 전자파국민안심컨설팅사업, 노인일자리담당자업무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은 하루 3시간씩 22일간 일하면 한 달에 761,040원을 받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조기에 마감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사업단에는 강사파견사업단, 우리학교깔끄미사업, 명아주지팡이제작사업, 노대가인카페사업, 사직골شط터봉제사업, 주월가인카페사업, 식당아띠애사업, 손수레금수레사업, 공동작업장사업단, 임대주택미화관리사업, 참기름제조사업, 시니어스토어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식당아띠애에서 하루 2시간씩 15일간 월 30시간을 일하면 50만 원을 받거나, 참기름제조사업단에서 참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참여자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이 늘고, 수익이 많으면 참여자가 받는 것도 늘어날 수도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요양업, 주유업, 요양병원업, 음식점업, 의류제조업, 보육업, 교육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 김치제조업, 사회복지업, 노인복지업 등이 있다. 음식점업이라면 지정된 식당에서 조리원 등으로 일하는 것이다. 다른 노인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세지만 급여도 많은 편이다. 해당 업종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된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12월 27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즉, 자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군·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당사자가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쉽게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여기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일자리 검색 및 접수’를 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하며,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초기 화면에서 ‘지역구(시·군·구)를 입력하세요’란에 신청자 본인의 주소를 쓰면 전체 노인일자리 혹은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시니어인턴십 각각으로 검색할 수 있다. 현재 접수중인지 마감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접수중인 사업 중에서 골라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가 많으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노인일자리에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여기 <https://www.seniorro.or.kr:443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인상되었다

2024년에 장애인이 매달 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작년보다 인상되었다. 등록장애인으로서는 연령, 장애수준,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부합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등록장애인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 될 때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장애인카드를 받기 바란다. 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복지로’에서 ‘장애인’으로 검색되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확인하고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인 장애인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중증장애인은 소득이 낮을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을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연금의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과 수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고, 4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있어서 3급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진 자는 제외)으로 소득 하위 70%인 사람이 신청하면 매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8만 원 이하일 때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생활수준의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에 6.8% 인상되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의 액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차상위초과 소득자로 나뉘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차감된다. 2024년에 18~64세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는 334,810원까지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최하 1인 2만 원, 2인 4만 원).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이다. 선정기준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18~64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9만 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0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424,810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9만 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매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급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초·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경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의 범위에서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에 속해야 한다.

급여액은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이다. 경증장애인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원을 받는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길 희망하는 장애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며, 시·군·구가 자격여부를 확정지어 수급자로 결정하면 수급자 통장으로 매달 20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한편, 등록장애인은 TV수신료 전액 면제, 통신요금 50%~30% 감면,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등의 감면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와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은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정부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를 인상하고,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천 명에서 8만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3월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아 보육·교육 여건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말 1,637개소에서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충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 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도 지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023년말 누적 89개소),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을 19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하며, 지원규모도 1인당 월 9만5천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관광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4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131억 원, 575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모의적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2023년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모의적용은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8개)와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1호선 시청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지만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며 “출근길 집회”를 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였다. 광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니, 다른 지역도 살펴보기 바란다.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설립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복합 수련시설 등 장애인 복지·의료 기반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를 북구 본촌동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착공해 오는 10월 개원한다. 72억 원을 투입해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 44병상(낮 병동 24·입원 병상 20)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입원 대기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 장애아동과 가족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된 광산구 우리동네의원은 장애 친화 탈의실, 휠체어 체중계, 장애 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을 갖춰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자동 소변 수집 장치도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이 건립된다>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이 들어선다. 407억8천만 원을 투입해 숙소, 전시실, 장애 체험장,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등을 갖춘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1월 기존 건축물 해체에 들어가 2025년께 준공할 예정이다. 이 수련시설은 장애인 인권타운을 지향하고 있다. 인화학교는 일부 교직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이 학교는 2011년 문을 닫았지만 법인 청산절차는 퇴직금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2014년에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옛 인화학교 대책위, 동문,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작업팀을 구성해 시로 귀속된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해왔다. 관계자는 “성폭력 등 청각장애 학생 인권유린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관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지속된다>

광주광역시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도 지속한다. 장애인은 15개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수준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한 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서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서비스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18~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인데,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즉,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 산책이나 음악 감상,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12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렸다>

서울특별시도 2024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천363억 원을 투입한다. 2024년 서울시 총예산은 45조7천40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4천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천263억원(8.4%) 늘어난 수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천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천321억 원을 책정했다. 이 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되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천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준다>

서울시는 최중증 장애인(발달 장애 등) 2668명에게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최중증 장애인(발달 장애 등)에게 1인당 매월 161만5000원~565만25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등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천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거점 공간을 확충한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여름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7월~9월) 발굴한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노인 위기가구 2천7백 명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벌여 위기가구를 발굴한 바 있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 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은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가구별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7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교통사고,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물론 이러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고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도 신고할 수 있으니 129번 전화나 시·군·구로 연락하기 바란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부터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곳인데, 2024년 3월 기준 전국 5.5만 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한다>

정부는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자가 생활하는 시설은 정원 50명 이하인 경우에 월 10만 원, 51명~100명인 시설은 월 30만 원, 100명 초과 시설은 월 50만 원을 냉방비로 지원하고,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은 거주자가 하루 24시간을 시설에서 보내지만,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주로 낮시간만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냉방비 지원은 여름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와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폭염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냉방비는 부족할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보호 대책 일환으로 9300여 개소 경로당 냉방비를 16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해 7~8월 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 211개소에도 등록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경로당 냉방비를 추가로 월 17만5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6만5000원이었던 것에 1만 원을 인정한 것은 이용시간의 연장을 고려할 때 빈약한 대책이다. 한편, 전남도는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신규 설치 50개소를 포함해 총 1451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124개를 설치해 경로당에서 공동 숙식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통해 마을공동체 돌봄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에서 주무시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대할만한 사업이다. 아울러, 좌식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76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픈 어르신들의 불편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2만여 개소와 의료기관 중 전국 병원급 이상 7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이 지혜를 모아 여름철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보내길 기원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위기가구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위기 의심 가구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시범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구축하고, 7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며 11월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을 하여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경제, 고용위기 관련 공통 질문 후 위기정보 관련 추가 질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자를 발송하고 초기상담을 한다>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상담전화를 하기 전에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또한 긴급하게 복지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여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전화발신시 발신자명은 “읍·면·동 AI복지상담”으로 표시된다. 초기 복지상담을 완료한 후 상담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기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복지공무원이 심층상담을 한다. 복지부는 중앙발굴대상을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도 자체 발굴한다. 중앙정부는 단전, 단수 등 45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조사(격월 연 6회, 약 120만 명)를 실시한다. 자치단체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AI 상담요청을 하고, 사전 SMS(문자) 발송을 한다.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가 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고 본인 확인과 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복이음을 통해 발굴대상에게 AI초기상담전화를 한다. 초기상담 내용은 공통적으로 건강, 경제, 고용 관련 질문을 한다. 추가적으로 가족돌봄, 주거, 안전, 갈등과 단절 등을 묻는다. 통화 내용을 자치단체로 제공한다. 자치단체는 초기상담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심층상담을 하고 복지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복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상담사업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

복지부의 ‘인공지능 상담 시범 사업’은 위기가구를 보다 촘촘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최근 광주드림이 취재한 결과, 복지부는 광주광역시 일선 자치구(광산구, 서구, 남구) 거주민 중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당사자들에게 ‘지역 번호(062)-XXX’로 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에는 복지부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발굴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AI 복지봇이 상담을 위해 1600-2129(발신 전용) 전화가 갈 것이라던 예고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같은 문자 발송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등재된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는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1374명, 남구는 655명의 명단을 복지부에서 받았다. 문자를 받은 A 씨는 “8월 12일 느닷없이 복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수 분 후에 ‘복지가 필요하냐?’란 기계음 전화를 받았다”며 “이상해서 문자에 적힌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보니, ‘귀하는 고용보험 상실 이력이 있어 위기가구 대상자라 문자가 전달된 것 같다’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 해당이 안 되는 데 전화받은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내 상실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향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통보받아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발

굴을 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조직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강동 위함 (fo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민관이 함께 찾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와 서비스 지원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구청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복지협력체계 구성, 민관협력 선포식, 신고의무자 역량강화 교육, 신고매뉴얼 제작·배부, 문고리 방문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기반형 위기가구 발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에 강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방곳곳 문고리 방문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90여 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보였고, 올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599명의 복지통장들이 관내 18개 동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콜 및 상담 연락처를 담은 문고리형 안내문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강동구는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총 3,486가구를 발굴했고 668가구에 공적급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위기가구 발굴 포상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포상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23년 7월부터 주민 모두가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위기가구 발굴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업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리고, 이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하고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1년이 넘었음에도 포상받은 주민은 아직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의 민감성을 고려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s://www.ssis.or.kr>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장치이다. 특정 가구의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정보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을 분석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와 상담하여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사전 문자 발송→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지방자치단체 심층상담·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국민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면 129번 전화나 시·군·구 등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직무 수행 중에 위기가구를 본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등은 긴급복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8.7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좋은이웃들'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으로 7.2만 명이 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시행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건강을 지원한다>

정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을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간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수급자는 제때에 바우처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의원에서 무상으로 받고, 코로나19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맞을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을 강화한다>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0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에 일상돌봄을 18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는데 2025년에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긴급돌봄을 122개에서 13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상시 혹은 긴급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이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 2,392,013원으로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상한선이 713,102원에서 765,444원으로 인상된다. 해가 바뀌면 1인 가구 생계급여액도 765,444원까지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오를 뿐 아니라, 수많은 복지급여가 영향을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에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2025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킨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춥춥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서로 관심을 갖고, 실직과 폐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129번으로 긴급 복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확대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러 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공모절차 간소화, 사업관리 체계화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관리를 해 역량 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과 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 수요기반 연계사업 확충(스마트팜 등 4개), 관계부처 통합공모 내실화, 공모 선정 후 사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일자리, 돌봄 등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4개 추가해 22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동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기존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자체에서 2025년 이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해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한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선정된 지자체가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2024년에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

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충북 보은군·충남 금산군·전북 김제시·부안군·전남 구례군·곡성군·경북 영주시·상주시·경남 사천시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처음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조성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 연고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해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시·군·구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개별지원은 다소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행안부와 협업구조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중앙-지방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부처 정책을 활용해 기획한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하며 지자체는 기금 활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외국인채용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한다.

<관계부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 때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평가·선정하고 지자체와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해 연 서너 곳을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메뉴판 구성, 공동 평가·선정 및 패키지 지원,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다.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자체 대상 협업프로그램 설명회, 부처 공동 공모·선정,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및 의결한다.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각 부처별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방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비롯해 주간인구와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처음 지정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신 통폐합을 통한 행정구역 구조조정을 제안하였다. 인접 지역과 통합하거나, 광역시와 인접 시·군을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정책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 등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백신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인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예방주사 맞기를 당부했다.

<HPV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는 유두종바이러스군의 일종으로 피부와 점막에 감염을 일으킨다. 감염 후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생식기나 피부에 사마귀 발생을 유발하거나 자궁경부, 항문, 질, 음순 등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모체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 출생과정에서 아이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주요 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HPV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여성의 자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궁의 약 3/4을 차지하는 몸 부분인 체부와 질로 연결되는 목 부분인 경부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목 부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발생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예방 백신이 존재한다.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도 높다. 임신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암이기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그중에서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여럿일 경우, 사회적·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에 발생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분만 횟수나 감염, 본인과 배우자의 위생 상태, 흡연 등도 자궁경부암의 원인 인자로 작용한다.

가장 유력한 요인은 HPV인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에서 HPV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며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다.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HPV 감염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만, 감염 상태가 지속되면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백신접종은 성관계 시작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부분은 HPV에 감염되었기에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남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환자 현황’을 바탕으로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를 강조하였다.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 30만2,960명에서 2022년 42만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2022년 6,003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은 2022년도 기준 남성이 10만4,881명(24.4%), 여성이 32만4,173명(75.6%)이었으며, 구인두암은 남성이 4,890명(81.5%), 여성이 1,113명(18.5%)으로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뇌와 안구에 발생하는 종양을 제외하고, 얼굴, 코, 목, 입안, 후두, 인두, 침샘 및 갑상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악성 종양은 빠른 성장, 침윤성 성장(파고들거나 퍼져 나감), 체내 각 부위에 확산 및 전이하여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종양이다. 두경부암 중 구강에 생기는 암을 구강암, 소리를 내는 기관인 후두에 생기는 암을 후두암, 인두에 생기는 암을 인두암이라고 한다. 인두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으로 나뉘고, 갑상선암은 포괄적 의미의 두경부암에 포함된다.

<12~17세 여성 청소년은 예방접종이 무료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에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지원한다. 2024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중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은 흑 생일이 지났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즉, 2006년 1월생 여아는 2월에 만 18세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예방접종을 받을 시점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1차 접종 후 저소득층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2차와 3차 접종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접종 당일의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HPV 예방접종을 일찍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기에 14세 이전에 맞기 바란다. 2024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간혹 “HPV 1차 접종 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완료한다. 초회 접종 연령에 따라 2차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다. 즉, 12세에 HPV 1차 접종을 하고 15세에 2차 접종을 하면, 초회 접종 연령이 14세 이하이기에 총 2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방문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도 12~17세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청년이 HPV 백신 예방접종을 받도록 관심을 갖기 바란다.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에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을 시작하여, 2022년부터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인 백신은 2가~4가이며, 9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가 또는 4가 백신을 여성 청소년에만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8개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9가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가다실9가 백신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무료 접종실시’가 포함돼 있으나,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HPV 백신접종을 받고, 같은 연령대 남성도 무료로 맞도록 하자.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어린이와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9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이, 임신부 순으로 맞고, 어르신은 “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이 원칙이다. 우선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다.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게 된다.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하기에 세계보건기구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어르신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10월 1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으므로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초기에 사람이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75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자)은 10월 11일부터, 70~74세(1950~1954년 출생자)는 15일부터, 65~69세(1955~1959년 출생자)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한다. 독감은 겨울에 유행하기에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첫날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으로 인해 70~90% 예방효과가 있다. 백신 접종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에 중요하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빨갳게 부어오르는 현상)과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 1~2일 안에 사라진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는 사람과, 약이나 음

식품(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때 ‘있다’고 꼭 표기하기 바란다.

<독감 예방접종에는 4가 백신이 쓰인다>

이번 인플루엔자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 권장주가 포함된 4가 백신이 쓰인다. 1천170만 도즈(1회 접종분) 조달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로, 질병관리청은 대상별 접종 시행 이전에 배송이 모두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무료 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추가 지원하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나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본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을 포함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다.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신분증, 청소년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신청하여 출력하면 된다.

<사전에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가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된다. 전자예진표는 병원 방문 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접종 당일에 작성한 예진표만 유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경우에는 각각 전자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올해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예진표를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방접종 예진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본인(혹은 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읽고, 필수 입력 항목 등을 적으면 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혹은 집 전화번호, 성별, 실제 생년월일은 필수 입

력항목이다.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에 본인(혹은 법정대리인, 보호자)이 동의해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자예진표는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종대상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표시해야 한다(본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받거나 치료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여성만 해당)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를 표시한 다음에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이 확인후 저장을 누르면 완료된다. 자신의 컴퓨터로 예방접종을 받는 날에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전자예진표를 작성해도 되지만,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아이패드로 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

무료 접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을 위해 유료 접종을 받는 것도 권장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2~4만 원 정도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을 찾기 바란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http://nip.kdca.go.kr>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2024년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이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2023년 9월 기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51,434천 명이다. 그중 직장가입자는 19,889천 명(38.7%)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6,913천 명(32.9%)이며, 지역가입자는 14,632천 명(28.4%)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보수월액보험료만 내지만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024년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7.09%)’이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이다.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이다.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2024년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 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208.4원)'이다. 그중 소득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이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을 부과한다.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소득이 336만 원 초과~7억1,776만 원 이하이면 소득 점수는 $95.25911708+(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이고, 7억1,776만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점수는 20,348.90점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60등급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부과되기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적지 않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교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재산보험료가 없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인하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또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된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인상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된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경감 혹은 면제받을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근무하면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경감받고, 섬·벽지 근무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은 가입자 보험료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휴직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섬·벽지에 거주하면 보험료의 50%, 농어촌 거주자는 보험료의 22%를 경감받고,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은 보험료의 10~30%를 경감받는데,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받는다. 또한, 재해를 받은 세대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고,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이다. 예컨대, 섬에 사는 65세 이상 농업인은 섬·벽지 경감⇒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세대경감 순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를 받을 수 있다.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2023년에 전체 진료비 중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을 낸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를 받는 수급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수급자는 2018년에 126만5921명에서 2023년에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9.7% 증가하였다. 지급액은 2018년에 1조7,999억 원에서 2023년에 2조6,278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2023년도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3,035명(7.7%) 증가하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 원(6.4%)이 증가하였다. 2023년에 수급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미리 주거나 신청하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요양병원 입원시 1,01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 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고,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http://www.nhis.or.kr> 이고, The건강보험앱, 문의전화는 1577-1000이다.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이다. 본인이 병의원에 냈더라도 다음 금액은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된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과 인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보다는 병원, 병원보다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본인부담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기에 병원을 이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 어떤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갑병원 500만 원, 을병원 200만 원, 병병원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5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770만 원(연간 본인부담금총액)에서 162만 원(본인부담상한액)을 뺀 608만 원이다. 이 가입자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때에는 770만 원에서 227만 원을 뺀 환급금은 543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하위 50%가 많이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수급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받는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하고, 그 금액은 1조9,899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이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상한액을 달리한다.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연간 87만 원을 넘기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고, 2~3분위는 108만 원, 4~5분위는 162만 원, 6~7분위는 303만 원, 8분위는 414만 원, 9분위는 497만 원, 10분위는 진료비가 780만 원 이상일 때 본인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에는 본인부담한도액이 1분위 134만 원, 2~3분위 168만 원, 4~5분위 227만 원, 6~7분위 375만 원, 8분위 538만 원, 9분위 646만 원, 10분위 1,014만 원으로 증액된다.

<고소득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기 어렵다>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액 이상의 진료비는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특정 병의원만

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무과 직원이 본인부담금한도액 이상의 진료비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특정 병원에 장기간 이용하여 진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을 넘길 경우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이 일단 본인부담금을 받고 사후에 공단이 상한액을 환급해준다.

2023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대상자 수는 1분위 621,203명(전체의 30.9%)이고, 2~3분위 814,072명(40.5%), 4~5분위 333,289명(16.6%)로 1~5분위가 1,768,564명으로 88.0%를 차지했다. 또한 6~7분위 141,793명(7.0%)이고, 8분위 43,614명(2.1%), 9분위 40,430명(2.0%), 10분위 17,179명(0.9%)으로 6~10분위 소득자(전체의 22.0%)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이 55.8%이고 지급액의 64.5%를 받는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받는 사람은 65세 이상이 110만1,987명으로 전체의 54.8%이고, 이들이 1조6,965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자의 연령별 지급금액을 보면, 0~18세는 25,572명으로 전체의 1.3%(금액 기준 0.9%)이고, 19~39세 145,500명으로 7.2%(금액 4.9%), 40~64세 788,521명으로 36.7%(금액 29.7%)이었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9%인데,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54.8%와 지급액의 64.5%를 차지한 것은 이들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여 진료비도 많이 지불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환급 대상이 되면 내역에 나타나고, 아니면 “내역이 없습니다”로 나온다. 내역이 있으면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정보이용동의와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마무리 된다. 신청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사전에 공단에 지급동의계좌 등록 신청을 하면 매년 8월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병원 진료비를 많이 낸 사람은 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조회하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잠복 결핵감염을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핵이 약 12.4배 발생할 수 있는 잠복 결핵감염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잠복 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병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이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지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결핵균이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결핵균이 침입한 후 체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확률이 높다. 결핵은 폐,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거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결핵균이 폐 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된다. 즉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된다.

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그렇기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다. 체중이 감소하고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다. 그래서 정부는 결핵 후보군인 잠복 결핵감염 양성자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잠복 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잠복 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 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아의 결핵 발병 위험률은 40~50%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결핵을 앓은 전국 영유아 시설 종사자가 14건(잠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11건)보다 2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6건에서 11건으로 83.3%나 급증했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지만, 2세 미만의 소아는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과 좁쌀결핵은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4월부터 어린이집 교직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결핵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누가 잠복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할까?>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결핵 발생 시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복 결핵감염자는 당장 결핵균이 활성화돼 전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했거나 집단 시설에 근무 중인데 잠복 결핵에 감염됐다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잠복 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국민건강보험 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한다. 즉, 잠복 결핵감염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잠복 결핵감염 치료시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

잠복 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 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치료는 리팜핀제제 4개월 요법 혹은 이소니아지드·리팜핀제제 3개월 요법을 권고하고, 이소니아지드제제 9개월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약제를 정해진 기간 내 최소 80% 이상 복용한 경우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한다. 치료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 2년까지 연 2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지만 결핵으로 발전하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정부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에서 잠복 결핵감염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권고하고 있다. 결핵 치료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잠

복 결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결핵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한다.

<잠복 결핵감염의 치료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잠복 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 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 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 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이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 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2023년 12월까지 잠복 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이 12.4배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 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 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 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잠복 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 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잠복 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4월 1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인쇄본 책자를 보길 희망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민간의료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핵이 의심되면 잠복 결핵 검진을 받고 감염자일 때에는 꼭 치료받기 바란다.

결핵ZERO <http://tbzero.kdca.go.kr>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꾼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꾸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α 투자와는 별개로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에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로 높인다>

한국 요양취급기관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선진국은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의뢰서를 써주어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절차가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 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 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작업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인의 의료 관행을 보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진료시에 본인부담금을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이상, 입원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같은 진료행위라도 ‘의료수가’가 조금씩 높아 환자가 큰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고, 의료기관들도 “최신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 “최고 전문의가 있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서 가벼운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온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대부분 병원은 많은 환자를 받거나 특정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한 사람당 진료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이행되려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에 돈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α ’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5만 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추진되기에 국민은 이 사업의 이행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 출처

[광주드림에 기사가 게재된 날짜]

머리말-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4/01/11]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05/16]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12/26]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03/21]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시범 적용한다[05/30]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08/14]

6월에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06/05]

최대 50% 할인 받아 가을 여행을 떠난다[10/24]

대중교통 무상 승차가 확대된다[12/19]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이 바뀐다[11/28]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아동>

2024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다 [2024/02/01]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사전 신청하세요[02/15]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05/09]

육아휴직 급여액 월 250만 원까지 받는다[10/17]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09/05]

아동학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05/2]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11/14]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07/04]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03/14]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07/25]

방학 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08/01]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세요[03/07]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하세요[11/21]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08/08]

청년은 문화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03/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02/29]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11/07]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원한다 [05/23]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노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01/04]
집과 같은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04/04]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06/20]
치매, 이렇게 대처합시다[02/0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된다[06/27]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발표되었다[09/12]
외국인 1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10/31]
폐지수집 노인의 지원대책은?[07/18]
중장년층은 50플러스센터를 활용하세요[07/11]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12/12]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인상되었다[01/18]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04/11]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04/25]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시민>

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06/13]
위기가구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다[08/22]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한다[12/05]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확대한다[08/29]
백신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01/25]
어린이와 노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09/2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02/2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09/19]
잠복 결핵감염을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04/18]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꾼다[10/10]

이용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지정책 연구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사회복지(2002), 디지털 청소년복지(2004), 디지털 복지시대(2004),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활기찬 노년생활(2020), 디지털 사회보장론(2020), 복지행정의 선구자 김학묵(2023),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상식(2024), 사회복지 역사와 인물(2024),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키운다(2025) 등 100 권 이상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사회복지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 위원,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으로 일하였다.

이 메 일 ewelfare@hanmail.net (강의 문의와 상담)

카 페 <http://cafe.daum.net/ewelfare>

이 연구는 2025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복지상식

펴낸날 2025년 1월 1일

저 자 이용교

펴낸곳 복지공동체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31번 안길2

101-1202 한국복지교육원

전 화 02-676-1032

정 가 15,000원